

第284回國會
(定期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10 號

國會事務處

2009年11月10日(火) 午前 10時

議事日程

- 1. 경제에 관한 질문

附議된案件

- 1. 경제에 관한 질문 1
- o 서해교전 상황 보고 23
- 1. 경제에 관한 질문(계속) 24

(10시04분 개의)

○의장 김형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이종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형오 지금 방청석에는 이종구 의원의 소개로 지역 구민인 서울 강남 갑에서 40인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 경제에 관한 질문

(10시06분)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효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담양·곡성·구례 출신의 민주당 김효석 의원입니다.

총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문지를 보내드렸는데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받았습니다.

○김효석 의원 질문지도 드렸고 오늘 답변 시간을 제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효석 의원 그러니까 평소 총리의 소신을 이 자리에서 국민들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고맙습니다.

○김효석 의원 어제 뭐 장학퀴즈 때문에 좀 당황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용어가 잘못되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 의원 이것은 질문에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묻는 것은 지금부터 짧게 짧게 답변하시는데 이것은 총리를 제가 테스트하려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효석 의원 우리 스스로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요새 날씨가 추워지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선 연탄 한 장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탄 값이 없어서 걱정하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16만 가구 정도 됩니다.

한전, 잘 아시는 한전에 전기료를 못 내서 연체하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68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새 농민들이 다 지은 농사를 지금 갈아엎고

있습니다.

쌀 한 가마니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20kg에 한 4만 원입니다.

○김호석 의원 작년에 비해서 얼마가 떨어진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조금 떨어졌습니다.

○김호석 의원 한 15% 정도 떨어졌습니다.

원가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쌀 한 가마니 생산하는 데?

좋습니다.

택시기사가 한 달에 얼마나 버나요?

○국무총리 정운찬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150만 원입니다.

○김호석 의원 좋습니다.

비정규직이 한 달 수입이 얼마쯤 될까요?

○국무총리 정운찬 100만 원 이하입니다.

○김호석 의원 한 120만 원.

좋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경제라는 것은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현장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선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즉 MB노믹스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이명박 정부의 경제 분야 국정철학은 자율과 경쟁을 최대한 보장하고 또 개방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추구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호석 의원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에 노선을 같이 하지 않나요?

○국무총리 정운찬 이명박 정부의 출범 초기에는 다소 신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했습니다만 얼마 지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은 중시하되 경쟁에서 처진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호석 의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중도실용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이 친서민·중도실용을 내걸기 이전하고 내건 다음에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우선 정부에 있는 분들의 말씀의 톤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경쟁, 자율,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그것뿐

이 아니라 남에 대한…… 서민에 대한 보호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김호석 의원 그러면 부자 감세가 달라졌습니까, 친기업 정책이 달라졌습니까, 시장 만능·규제 완화가 달라졌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보기는 감세에 대해서는 경직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신축적인 사고로 바뀌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친기업 정책…… 기업하고 지금 척을 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맹목적인 친기업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호석 의원 예, 좋습니다. 달라졌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믿질 않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자 감세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 소득세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최근에는 OECD 국가하고는 평균적으로 비슷해졌지만 한국의 소득세율은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호석 의원 그렇지요? 지금 화면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니, 이 화면 말고 그 그림사진이 나올 겁니다. 박지성 선수하고 이견희 회장의 사진입니다. 저 52 대 35가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무슨 의미인지 한번 유추해 보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세율이 아니겠습니까?

○김호석 의원 이견 장학퀴즈가 아니고 소득세율인데 박지성 선수가 네덜란드에서 뛴 때 소득세가 52%였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뛰고 있는데 영국은 괄호 보시면 40%예요. 우리나라에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삼성의 이견희 회장이 35%입니다. 우리의 소득세율이 높질 않습니다.

이승엽 선수가 소득세 얼마 내는지 아십니까, 일본에서? 40% 내고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얼마 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에, 현재는 35%인데 내년부터 39.6%로 또 인상을 합니다.

높질 않습니다, 소득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 29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소득세가 19번째입니다.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또 어떻게 달라지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현재로서는 고소득자에 대해서 2% 인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 의원 예, 추가로 또 인하하겠다 이런

얘기이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효석 의원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돼 있지요?

법인세가 어떻습니까? 법인세 세율은 얼마나 되지요, 지금 최고세율?

○국무총리 정운찬 한 20% 전반부에 있지 않습니까?

○김효석 의원 22%……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효석 의원 OECD 국가 중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OECD 국가에 비해서 낮습니다.

○김효석 의원 예, 표를 보여 주기 바랍니다.

30개 국 중에서, 이걸 소득세고 우리나라 법인세를 보시게 되면 이 다음에, 22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세율이 그렇게 높질 않습니다.

내년부터 또 어떻게 달라지지요, 법인세가?

○국무총리 정운찬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냥 앞으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역시 2%……

○김효석 의원 또 낮출 예정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효석 의원 우리나라는 세금만 보자면 부자들이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부담하는 간접세, 예를 들면 유류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비슷하거나 높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담하는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낮습니다. 어디에 비해서도 우리가 높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러나 한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비교하는 게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선진국이고, 이른바 선진국이고 또 하나는 우리 주변의 경쟁국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진국은 우리하고 복지제도나 조세 부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선진국과 직접적으로 법인세·소득세율을 비교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은 조금 있다고 하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경쟁국 또 동구나 신흥 공업국 수준의 그 나라의 세율을 비교해 보면 우리보다는

조금 낮은 데는 있습니다.

○김효석 의원 그게 정부의 논리인데 정부가 비교할 때 ‘홍콩, 싱가포르, 중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우리가 높다’ 이런 얘기인데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와 우리나라가 같습니까, 형편이?

○국무총리 정운찬 비교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김효석 의원 적절하지 않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쪽은 몇 백만 나라이고 우리는……

○김효석 의원 자꾸 여기에 비교해서 우리가 높기 때문에……

또 중국하고 우리하고 여건이 같습니까? 중국은 지금까지 사회주의 하다가 이제 겨우 시장경제로 바뀌고 있는 나라예요. 어떻게 이런 나라와 비교해서 자꾸 우리가 높다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고 나라 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되어 가면서 이게 정부 재정에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당연히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짐에 따라 한편으로는 복지 지출이 급증해서 사회보장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역시 세금은 또 줄어들고 해서 재정에 주름살을 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효석 의원 이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IMF 자료인데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2050년까지 3개만 봤습니다. 이게 연금, 의료비, 장기요양보험, 3개로만 봐도 GDP 대비 13.4%가 늘어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재정 부담이 늘어납니다.

다른 선진국을 보면 보통 2%~3%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됐거나 연금이 이미 성숙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만큼 재정 부담이 앞으로 다가올 엄청나게 큰 어려운 형국에 있습니다.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총리께서는 임명 전에는 이 감세 정책에 대해서 격렬히 비판했던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격렬히는 아니지만 저는 감

세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우선, 경기적인 측면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감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 또 형평 측면에서 감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조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겠지만 상당히 많은 서민들은 세금을 거의 안 내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형평 측면에서도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제가 논리를 펴왔습니다.

○**김효석 의원** 그러면 내년부터 추가로 지금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대기업에 대한 추가 감세……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국회에서 별도 토론할 예정 아니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또 경제가 어려운 원인 중의 하나는 투자의 부진이기 때문에 투자의 부진이 더 나빠지지는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세에 대해서는 단답을 내기 힘들지만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현재 총리로서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앞으로 토론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석 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리께서 지난 인사청문회 때 답변과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감세 정책을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했고 그 결말이 어떻게 났고 얼마나 심각한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잠깐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총리께서는 미국이 감세를 시행하게 된 배경 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내용을 아시지요?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1980년대 초반에 레이건 대통령이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감세부터 하고 보자 했습니다. 그때 그 이론을 제공한 것이 이른바 공급경제학이라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후에 또 부시 대통령 때, 특히 아들 부시 대통령 때 역시 또 경기가 위축됐다 해서 이것을 부양하기 위해서 감세 정책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석 의원** 레이건 때, 1차 감세 때는 그래든 큰 문제가 안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득세율이 70%였고 법인세가 48%였기 때문에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아들 부시 정부, 2001년에 했던 감세가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율 자체도 높지도 않았고 재정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이라크 전쟁 때문에—증세를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감세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경제가 망가졌는데, 이 그래프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레이건 정부 때……

감세를 하게 되면 결국 재정적자와 달러화 폭락이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맨 오른쪽이 부시 정부 때 감세입니다. 그러니까 클린턴 정부 때 일시 증세를 해서 재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부시 들어와 가지고, 아들 부시 정부에 와서 다시 감세를 해 가지고 미국 재정이 지금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작년도에 금융 위기까지 발생하게 되니까 달러화가 폭락해서 전 세계에 지금 공포감을 주고 경제에 주름살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감세 정책의 결말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그런데 의원님,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미국 경제가 어렵게 된 것은 감세만은 아니고 레이건 때나 부시 때나 국방비를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썼기 때문에 재정 수치가 아주 악화되고 그것이 경제에 전체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도 그냥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석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그래프에도 그게 표시가 됐는데, 그러니까 부시 때는 이라크 전쟁 또 레이건 때는 걸프 전쟁 때문에 국방비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세를 했기 때문에 재정이 완전 망가져 버린 겁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일본의 감세는 어땠나요? 언제 시작했고 또 일본이 감세를 해 가지고 지금 어떤 결과를 낳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90년대 초반에 이른바 ‘잃어버린 10년대’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10년의 경기 불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기를 좀 부양시키고자 했습니다. 특히 소비를 진작시켜야 되겠다 또 투자를 촉진해야 되겠다 해서 소득세도 인하하고 또 법인세도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세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

아서 결국은 경제가 회복도 안 되고 또 재정도 어려워졌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효석 의원** 그렇지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도 80년대 중반의 1차 감세는 그리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에 일본 경제 거품이 꺼지면서 그 대책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감세를 동시에 들고 나오면서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이 국가부채입니다. 국가부채는 지금 완전히 건잡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일본의 GDP입니다. GDP는 90년대 중반 이후에 성장이 완전히 멈추어버렸습니다.

지금 일본은, 국가부채 때문에 일본 경제는 꿈쩍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저 부채를 갚는 데…… 전혀 돈을 안 써도, 15년 동안 예산을 부채 갚는 데 써도 부족할 정도로 일본 경제는 완전히 망가지 버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뭘 느끼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일시적……

일본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본 경제는 아직도 특히 제조업이 튼튼하기 때문에 강한 경제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일시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 세율을 낮춘다든지 또 재정 지출을 늘린다든지 하는 것이 단기 효과도 많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또 경제를 어렵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일본 경제는 축적된 국채가 너무 많아서, 과거에는 세율 감소라든지 재정 확대라든지 이런 경기부양 정책을 쓸 수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정책도 쓰기 힘들 정도로 국가채무 비중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석 의원** 지금 GDP의 몇 %나 되지요, 국가채무가?

○**국무총리 정운찬** 글썽요, 그것도 백 한 육칠십%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석 의원** 지금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와 있는데……

그다음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재정적자 원인은 크게 세입, 세출 양쪽이 문제가 있습니다.

세입 쪽에서는 경기가 침체되어서 세입이 줄어드는데 말씀드린 대로 감세를 했고, 세출 쪽에서

는 노령화가 급격히 진전되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공공사업—댐을 130개나 만드는 사업—을 벌였던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4대강. 이게 지금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하고 일본 정부의 감세 논리하고 똑같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표를 보십시오. 세입과 세출 양쪽의, 우리나라의 처한 상황하고 일본이 5년 전, 10년 전에 했던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그 당시에든 투자들 또 대기업들 세금 깎아 주면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도 늘고 경기도 살아나고, 그래서 세수가 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효석 의원** 그래서 결국은 일본의 정권이 이번에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어 가지고 일본의 민주당이 집권하자마자 맨 처음으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세율 조정을 포함해서 재정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석 의원** 예, 재정 개혁하면서 맨 먼저 한 게 공공투자부터 투자를 중단해서 댐 건설했던 것 전부 중지시켰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유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이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 총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효석 의원** 기획재정부장관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김효석 의원** 성과는 괜찮았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잘 다녀왔습니다.

○**김효석 의원** 금년도에 재정적자가 얼마나 되지요, 우리나라 국가 살림이?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내년도에……

○**김효석 의원** 금년도 말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금년도요? 금년도가 지금 50조 정도 됩니다.

○**김효석 의원** 50조, 51조 예상하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김효석 의원** 내년도의 재정적자는 얼마로 예상합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내년도는 지금 30조를

조금 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석 의원** 예, 32조로 보고 있지만 저희는 사실상 50조 가까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만 해도 내년도에 6조 7000억이라고 하지만 이 중에서 3조 2000억을 수자원공사에 넘겼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그렇게 분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효석 의원** 예, 수자원공사는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나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채권 발행을 통해서 대부분이 조달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김효석 의원** 자, 수자원공사가 채권 발행해서 조달한 이 빚은, 이 금액은 국가채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 채무는 정부가 직접 상환할 의무가 있는 채무를 포함하기 때문에 공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는 국가채무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김효석 의원** 대부분의 국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 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나라가 오히려 거꾸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정부에서 하면 국가채무에 들어가고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국가채무에서 빠지고.

이렇게 해서 편법으로 처리한 게 내년도에 18조 정도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32조라고 정부는 얘기하지만 50조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재정적자를 총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앞으로 5년 동안 재정적자가 140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김효석 의원** 예, 정부는 140조 예상하시지만 이렇게 편법을 동원한 것을 감안한다면 제가 계산해 보니 거의 200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48년도 건국해서 2007년 참여정부 말까지 국가채무가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 숫자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효석 의원** 예, 297조 정도 됩니다. 300조 조금 안 되는데 이 중에서 적자성 채무, 말하자면 돈이 모자라서 꾸는 것, 국가가 꾸는 돈이 얼마인고 하니, 그것도 잘 모르시지요? 125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5년 동안에 진 빚이 거의 맞먹을 뿐 아니라 적자성 채무를 비교하면 우리가 정부 수립 이후에 2007년 참여정부 때까지 했던 빚보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지방정부 살림 형편은 어떻습니까? 요새 지방정부 재정 형편을 좀 아시나요, 장관께서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런데 존경하는 김의원님,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절대 비교하는 것은 일면의 타당성이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지금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전대미문의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맞이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의원님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확대 재정정책을 통해서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이번 G20 회담에서도, 제가 어제저녁에 귀국을 했습니다마는, 같은 나라들이 국제 공조를 통해서 재정 지출의 확대와 감세정책으로 이 어려운 경제문제에 대처해 오고 있는데 유독 한국이 어떻게 해서 앞서 가느냐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국에 와서 직접 보고 가십시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재정적자 문제, 재정의 건전성 문제 그 우려를 나라 재정의 장래를 생각해서 하시는 충정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단순한 숫자만 가지고 늘어놔서 굉장히 재정이 파탄이 날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것은 잘못이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확대 기능을 우려해 가지 그렇다고 해서 재정적자를 우려해서 재정의 건전성만 붙들고 매고 있으면 우리가 언제 필요한 일자리 만들며 실업대책을 하며 경기를 부양시키느냐, 그런 부분도 균형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김효석 의원** 장관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재정적자를 제가 문제 삼지 않는 이유는 금년도는 금융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를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지방정부 살림 형편이 어떤지 아세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방정부가 대단히 어려운 것을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석 의원** 우리 지역구인 담양·곡성·구례 각 군에 한 200억 정도씩 금년도 예산에 지금 차

질이 생겼습니다.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지 않으면 다른 방도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부채가 얼마나 빨리 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작년 1년 동안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공기업 부채가?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8조 정도는 것 같습니다.

○**김효석 의원** 44조. 정확한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44조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저하고 조금 차이가 있군요.

○**김효석 의원** 예, 들어가시지요.

총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윤증현 장관과 질문·답변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 공기업에까지 온 나라가 빚더미로 계속해서 불길처럼 지금 빛이 번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은 한 번 무너지면, 독이 무너지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사례에서, 일본의 사례에서 봤지 않습니까?

이 정부 내내 신종플루보다도 더 무서운 재정플루가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는 어차피 한 달 정도가 고비입니다. 이 한 달을 정부가 잘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정플루는 한 번 빚더미 공화국으로 우리가 전략하게 되면 이 고통이 현세대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까지 두고두고 미치게 됩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 플루를 예방하기 위해서 본인은 다음과 같은 즉각적이고도 포괄적인 네 가지의 백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백신, 추가적인 부자 감세, 깎아 주기 이것 중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약 5조 정도가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백신, 4대강 사업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부가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백보 양보해서 우선 시범사업부터 해 나가십시오. 왜 이렇게 4대강 사업을 서두릅니까? 왜 이렇게 밀어붙입니까? 우리가 3년 내에 이 사업을 안 하면 나라가 망합니까? 큰일 납니까?

자, 이런 부분, 4대강 사업에 관련 있는 모든 부분들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온통 불투명하고 여

러 가지 구린내가 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려면 시범사업부터 합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한 5조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백신, 과세 기반을 넓혀서 한 2조 원 정도를 확보합니다. 지금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탈루가 1조 50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 7000~8000억에다가 종부세를, 세율을 올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종부세를 정상화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종부세의 과세 대상, 빠져 있는 것들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고액 골프장이라든지 고액 콘도 회원권이라든지 상업용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넓히게 되면 여기에서 한 2조 정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12조 정도 백신 3까지 해서 돈이 만들어지고, 네 번째는 잠재 부채를 줄여 갑시다. 특히 공적연금을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공적연금 잠재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총리께서는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

○**김효석 의원** 잠재부채가 한 500조, KDI 보고서가 한 400조 넘어가고 매년 30조 이상 쌓아가는데 이 부분들을 개혁합니다. 이 네 가지 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의원님이 권고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효석 의원** 이렇게 하게 되면 당장 내년에만 한 12조 정도 예산이 만들어집니다. 돈이 만들어집니다. 그중에서 12조를 국가 빚을 줄이는 데 쓰든지 아니면 내년에 경기 어려워지게 되면 한 절반인 6조 정도는 국가부채를 줄이고 절반은 경기를 살리는 데 쓰는데 이것도 사람에 대한 투자로 해 나갑시다.

특히 국회에 재정플루대책특위를 만듭시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제1당이기에 때문에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은 그만두면 끝입니다, 돈을 쓰고 나면. 그렇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앞으로 두고두고 국민에게 계속 후손에 대해서, 후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재정은 우리 경제의 최대의 보루입니다. 우리 국가재정이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빚더미 공화국이 돼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를 최대한 저지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밀어붙이기 정권하에서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켜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김효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명수 의원의 소개로 충남 아산의 온아노인대학 학생 32인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종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남 갑 출신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경제 위기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내걸었지만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못하고 있으며, 서민의 주름살은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세종시와 4대강 사업을 놓고 논란이 증폭되면서 경제난으로 어려운 국민들은 더욱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야 할 정치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경제를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하는 정부가 부처 간 엇박자를 내면서 많은 불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총리께서 많이 성숙해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정책을 잘 하려면 냉철한 머리,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극복 과정에서는 빠른 다리를 추가해서 현장감을 갖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적시에 잘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본이 자민당 정권이 마감이 되고 정권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국가전략실이라는 것을 신설하고, 저탄소형 녹색산업 육성을 근간으로 해서 국가의 활력을 되찾는 국가전략을

종합적이고 다각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일자리 창출과 빈부격차 해소 문제는 좀더 범정부적으로 종합적인 국가전략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총리께서는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고급인력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을 시급히 세우셔서 국민에게 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뛰어넘는 선진화를 위해서 21세기 한국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무엇을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은 물론 많이 준비가 되셨겠습니까마는 총리의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정운영 철학과 비전에 대해서 한번 국민들께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산업화도 경험하고 민주화도 경험한 마당에 선진 일류국가로 이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 일류국가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는 네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성숙한 민주주의를 달성해야 합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남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제도적으로나 표면적으로는 한국만큼 민주주의가 잘돼 있는 나라도 없을지 모르겠으나 아직도 민주주의가 성숙됐다고는 말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투자가 절실히 필요한데 최근에 투자가 부진합니다.

그러면 투자 부진의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제가 생각하기는 역시 투자 대상을 더 찾아야 되는데 투자 대상을 더 찾으려면 R&D를 좀더 기초적으로 하고, 또 교육을 더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역시 사회구성원들이 통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통을 통한 갈등과 대립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끝으로 국가의 품격이 향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모두 다 이제는 글로벌 시민의식을 가져야 되고, 사회적으로 봐

서는 문화의 수준이 지금보다는 좀더 제고되고, 또한 사람과 사람 간의 생활에서 법제도가 좀더 선진화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금방 이 의원님이 일본의 국가전략실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미 지난 4월에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에 미래전략연구센터를 설치하고, 다른 연구기관들과 협력해서 미래전략이나 사회통합 문제 등을 중점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의원 그러니까 연구 좋은데요, 총리께서 국민들에게 그러한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함으로써 총리의 존재감을 좀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의원 이명박 정부가 아시다시피 ‘큰 시장, 작은 정부’를 내세우면서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재정의 이러한 선도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경제운용을 큰 정부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을 하는 것은 글로벌스탠더드를 지향하고, 또 규제개혁과 법질서 준수 등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활기찬 시장경제를 추구한다는 본래의 기본방침이 상당히 퇴색한 것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유효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지 않지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또는 그 이상 위기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된 것이 한 예입니다만 정부의 역할이 과거보다 더 강화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경제 활성화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시적 규제 유예나 3차례에 걸친 기업환경 개선대책 등을 통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또 기업의 투자에로 현안을 해소하고 OECD 최고 수준의 R&D 투자 세제지원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기본 정책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구 의원 지금 세계의 이런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여러 가지 경쟁력을 키우고 또 중소기업은 자생력을 키워서 생존을 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

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상생, 윈-윈(Win-Win), 이러한 것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대책을 저는 보지를 못 했어요. 이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MB정권이 친대기업 정부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총리가 중심이 돼서 경제각료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그러한 것을 실천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의 비전을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미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삼고 이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성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종구 의원 특히 저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가려야 됩니다. 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크고 그리고 대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그러한 로드맵을 잘 만드셔서 가지고 기업들에게 좀,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정책을 조속히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겠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있는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될라치면 금방 대기업에 대한, 대기업 대우를 해 가지고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 의원 총리께서는 노무현 정부가 포퓰리즘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남발을 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혁신도시, 거기다 덧붙여 가지고 공기업의 지방이전 또 행정부처의 분산, 이렇게 인기에 치중한 정책을 펼친 것을 알고 계시죠?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이종구 의원 제가 보니까 포퓰리즘으로 부풀려진 전국의 땅을 우리 참여정부가 수용을 했습니다. 이런 수용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가 얼마나 세금을 썼는지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십시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때 토지보상금 수준 걸 합한 것보다도 5년간 무려 거의 100조에

가까운 돈을 토지보상비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에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도 22조 5000억을 지급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행위는 주로 노무현 정권 때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2009년에도, 금년에도 한 20조 이상 또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몰려 가지고 토지 값이 뛰고 강남의 주택가격, 아파트가격을 올리는 주범으로 이렇게 작용을 했던 겁니다.

지금 전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기업도시 건설, 혁신도시 건설, 세종시, 새만금, 이렇게 벌여놓으면, 이 벌여놓은 국가가 토지보상비 줘 가지고 이렇게 널려 놔는데 누가 투자합니까? 그냥 그렇게 뭐 혁신도시, 기업도시 만들어 놓으면 다 되는 겁니까?

세종시에 이것을 자족도시를 만든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기업, 대학, 연구소들 이전을 앞으로 시킬 거죠?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렇죠?

○국무총리 정운찬 예, 유도하겠습니다.

○이종구 의원 그러면 이 기업들, 대학, 연구소 다른 데로 가려고 한 것 와 가지고 결국 제로섬 되는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구 의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 옆에……

○이종구 의원 그러면 제로섬이 안 되려면 새로운 기업투자 또는 외국인들의 투자,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종구 의원 좋아요. 진척이 있는데 그 기업이나 그 연구소나 그 대학들이 다른 예를 들면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로 가고자 했다가 그것을 진로를 바꿔서 세종시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국무총리 정운찬 그건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외국 연구소나 기업도 지금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세종시는 다른 데에 비해서 그 입지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옆에 대덕도 있고 오송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종구 의원 기존 기업과 대학들을 옮기려면 또 다른 특혜나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세금 깎아주고 부지 싸게 제공해 주고, 이렇게 되면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됩니까? 거

덜 나는 것 아닙니까?

너도 나도 나서 가지고 특혜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지역 이기주의, 기관 이기주의 이런 것에 떠밀려 가지고 노무현 정권이 벌여놓은 일 뒤치다꺼리 하다가 나라 살림은 절단 나고 세월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뒤치다꺼리만 하겠다는 겁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구 의원 지금 말이죠, 총리 잘 하시죠?

지방공항, 그렇죠? 대표적으로 김제공항 활주로는 고추 말리는 데 쓰고 있다고, 무슨 단지라고 하는 것 텅텅 비어 있는 것이 전국에 한두 개가 아니고 심지어는 삼절하다가 만 곳도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것 어떡하시겠어요?

저는 총리께 분명히 제가 충고를 드리겠어요.

이 세종시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논리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총리는 정치적인 문제인 세종시 문제에 나서시지 마세요. 총리가 나설 일이 아닙니다. 각료들을 잘 통솔을 해서 가지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분석을 하고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를 이렇게 제시하라고요. 정치적인 것에는 끼어들 필요가 없다, 정치적인 것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이전 반대부터 얼마나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왔습니까? 이러한 것은 정치권에 맡기시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어떤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각료들의 의견을 잘 수용을 해서 가지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밝히면 그걸로 총리의 일은 끝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떡하시겠어요?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지금 정치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종시와 관련된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를 지금 부각을 시키고 그것을 저희 내각이나 또는 여당이나 야당들에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구 의원 그리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특히 노무현 정권이 저질러 놓은 경제성 없는 산업단지, 지방공항, 기타 SOC,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해서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총리가 견해를 마련해 보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사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의원** 총리께서는 서울대총장 시절에 지역할당이라는 입학생 선발제도에 찬성하셨죠?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제가 도입했습니다.

지역할당이 아니라 지역균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했었습니다.

○**이종구 의원** 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의 역으로 어떤 평준화의 폐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 최근에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중국의 조선업이 한국을 추월한다.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의 아주 우수한, 조선기술이라는 것은 용접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우수한 용접공들이 중국에 많이 가서, 리타이어(retire)한 용접공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조선소를 지금 위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결국은 인재 싸움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김연아 선수라든지 또는 스포츠와 연예계에서의 한류스타 또 기능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들, 이런 분들을 선택과 집중을 잘 해 가지고 우리가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 경제를 특히 먹여 살릴 수 있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이러한 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 IT, BT, NT 등 산업에 필요한 우수 자원을 육성할 수 있는, 육성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청사진을 빨리 만들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보여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쎄요, 여기서 구체적인 계획을 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계획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의원** 지금 우리나라의 부채, 재정적자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부채비율을 보면 미국이 70%고 일본은 170%인데 우리나라는 35.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정부가 계속해서 논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일본은 자기 나라 돈을 찍어서 외국에 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원화가 국제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미

국하고 일본은 자기 나라 돈 찍어서 부채 해결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을 늘 합니다마는 원화의 국제화를 위한 그러한 계획, G20 이번에 한하는데 그 회의를 통해서도 원화의 국제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해 가지고 G20에 임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를 해 주시고.

또 지금 세계 선진국들은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이것을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편성에 있어서 이렇게 투명하고 가시화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특히 일본도 지금 인터넷으로 편성 자체부터 이것을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월하는 제도도 현재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제가 국가부채와 관련해 가지고 총리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채무백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지방정부 부채 이러한 협의의 국가채무뿐만 아니라 보증채무, 공기업 부채 등 광의의 부채까지 공개하고 국가부채실명제를 실시해야 된다, 국가채무에 관련된 기록들은 국무회의회의록에라도 이것을 공개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아주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나라를 정말 글로벌한 국가로 만들려면 당연히 투명성, 특히 행정의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가채무백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채무에 대한 관심을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 동의합니다마는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는 상당히 빠르지만 아직도 GDP에 대비해서 절대적인 수준은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종구 의원**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지 아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

○**이종구 의원**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투명하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구 의원** 지금 미국이 매년 3000억 달러의

전비를 쓰고 1조 달러의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를 운영하는 데, 제가 몇 번이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달러 위주, 달러 표시로 운영하는 것을 좀 줄여라. 지금도 계속 65%를 4년, 5년 동안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외환시장의 트렌드는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저 표를 한번 보십시오.

중간형 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외환보유고를 중시하고 또 복수통화의 외환보유고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뒤야 된다, 이것이 지금 세계 석학들의 권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다시 한번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감위원장 이렇게 한번 논의를 하셔서 가지고 통화제도를 이제는 바꾸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저는 존경하는 이 의원님께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선 복수통화라고 말씀하셨지만 통화를, 보유 외환을 한 가지로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어떤 특정 통화에 대해서도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역시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완전히 동의하고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 내각과 또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구 의원 감사합니다.

(김형오 의장, 문희상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문희상 이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순 의원 바로 그냥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지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갈등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아주 높습니다.

○김성순 의원 GDP의 27%나 된다고 그러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어떤 한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김성순 의원 그렇지요.

OECD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우리가 사회갈등비용이 많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하는 일 보면 사회갈등비용을 계속 늘리는 일만 지금 골라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대강도 그렇고 세종시, 그 원안대로 하고 보완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사회갈등비용을 높이는 일에 열중합니까? 또 내일신문 11월 5일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국민 중에서 82%가 정부정책이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그러합니다. 친서민, 친서민…… 아니라고 그러지만 국민들은 무려 82%나 그렇게 느끼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세종시나 4대강보다도 훨씬 더 큰 사회갈등비용을 불러올 겁니다. 이것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나라를? 한번 대책 말씀해 보세요, 있으면.

○국무총리 정운찬 글썄요. 뭐 좀 추상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사회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각계에서 어른들을 모셔다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집행을 하려는 계획도 있고 이미 벌써 정부에서 결과는 지금 의원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럽게 안 나왔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성순 의원 그것 형식적인 말씀을…… 아니, 사회통합위원회가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높아졌습니까, 갈등이? 사회통합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 얘기는 그만 합시다.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아주 특단의 노력을 하십시오, 계획을 세워서.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순 의원 4대강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낙동강과 영산강 4개 보를 착공하고 12일에 나머지 보 착공할 예정이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성순 의원 그것 예산심의 했습니까, 국회에서?

○국무총리 정운찬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순 의원 안 했는데 어떻게 막대한 국책사업을 그냥 막 착공부터 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김성순 의원 아, 참……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양해하신다면 4대강 문제는 저보다 더 잘 아는……

○김성순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국토해양부장관님 모시면 어

떨까요?

○**김성순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4대강 물이 썩었다, 또 강을 이렇게 내버려둔 나라는 세계에 없다 그랬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세계에 없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국의 강 수질오염도는 상당히 높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순 의원** 수질오염도가 다른 나라보다 높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모든 나라보다 높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순 의원** 아니, 지난 20년간 한 40조 이상 쏟아부어 가지고 역대 정부가 4대강, 12대강 살리기에 노력해서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세계에 내놓아도 조금도 뒤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버려둔 나라는 세계에 없다…… 그러면 다른 정부는 뭐 했습니까? 뒷짐 지고 구경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질이 나쁘고 수량 관리를 게을리 해왔다면 해당 공무원들 먼저 문책해야지요. 지금이라도 골라서 문책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김성순 의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OECD 회원국 강 68개, 그보다 좀 작지만 68개 주요 강을 죽 비교해 봤더니—3년간, 이것 2008년 통계입니다—평균 BOD가 2.7ppm입니다. 낙동강의 경우 예를 들어서 2.1ppm이에요. 라인강, 센강, 템스강, 도나우강…… 비슷해요, 우리하고. 그런데 다 썩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나쁜 선진국들의 주요 강들도 다 썩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어떤 강에서……

○**김성순 의원** 3ppm이면 2급수거든요, 그런데 그것 썩은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자 이거지요, 사실대로 하자 이거지요.

지금 김성순이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가만히 계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습시다마는 혹시 4대강 관련되는 것이라면 국토해양

부장관께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괜찮겠습니까?

○**김성순 의원** 나중에 묻겠습니다.

그런데요, 총리께서 아주 기본적인 것, 또 4대강 살리기 관련한 국토 개발에 대한 어떤 철학, 기본적인 것은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는 것이에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겠습니다.

○**김성순 의원** 그러니까 안 썩었다 그렇게 아시라는 말이에요. 썩었다 그러려면 반론을 제기해야지요. 그 표 보세요.

왜 이렇게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호도합니까?

정부가 일 가지고, 진실 가지고 내용 가지고 일을 해야지 홍보 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홍보로 다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주 비겁합니다, 그런 정부는.

자,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그랬어요, 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성순 의원** 그것 무슨 근거로 필수지요? 썩어서 그런가요?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대운하 얘기 나왔을 때는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반도, 3면이 바다로 쌓인 작은 나라에서 물류 목적으로 운하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랬으나 4대강, 이것은 3대강이건 어떻든지 간에 지난 한 50~60년 동안 우리나라는 산림녹화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아주 칭송받는 나라입니다.

민둥산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산으로 만든 나라는 후진국 중에는 적어도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산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강도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갖게 됐고 또 하나는 역시 이것도 통계상 반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기후변화가 많아서 홍수와 가뭄의 조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어려움에 대한, 위기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4대강 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고 그런 면에서 아마도……

○**김성순 의원** 부분적으로 그 말씀 맞는데요, 아마도 4대강 본류가 아니고…… 물 부족하다, 수질이 나쁘다 그러면 본류가 아니고 지점 일부

예요, 지류. 그것은 나중에 장관께 물겠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성순 의원 그런데 정부에서 아셔야 할 것은 대통령이 왜 '4대강 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자기 마음대로 그러느냐 이거예요.

대통령의 필수가 중요하니까, 국민의 선택이 중요하니까?

답변, 곤란하실 테니까 그냥 지나가지요.

그다음에 대통령 임기 내에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조금하게, 환경영향평가도 한 5개월 만에 이렇게 조금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심의도 안 했는데 막 착공하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제가 과학기술적 지식은 부족합니다라는 강에 관련된 사업은……

○김성순 의원 상식으로 얘기해 주세요, 총리께서.

○국무총리 정운찬 예, 빨리 해야지 윗부분 하다가 밑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랫부분 하다가 위에 문제가 생길까 봐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순 의원 그것은 국토부장관이 하는 얘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은 물론이고 아주 세계적인 학자들도 여기 와서 보고, 예컨대 일본의 하천복원 전문가인 이시카와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여기 와서 보고 뭐라느냐 하면 이 정도면 계획에서 추진하는 데까지 착공하는 데까지 10년 걸린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학자들은 한 4, 5년 걸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문가 말을 듣고 해야지요. 그리고 이렇게 22조가 아닙니다. 30조 넘어요, 한 40조 될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시간 있으면 제가 밝히겠지만.

이런 것을, 이런 국책사업 마스터플랜을 6개월 만에 완성한 사례를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들어보셨어요?

저는 조사해 봤습니다. 도대체 22조 2000억 드는 마스터플랜을 6개월 만에 완성한 나라가 있나 한번 봤어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러느냐 이거예요. 자그마치 전국 115개 대학의 2400명이 넘는 대학교수들이 1년 넘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참 귀를 닫아요.

그러면서 대통령 뭐라 그러느냐, 반대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또 반대를 위한 반대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UNEP 녹색성장보고서, 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성순 의원 거기서 4대강 사업이 기후변화와 친환경 녹색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지금 홍보하고 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성순 의원 그 원문이 이건데요, 저도 이것 읽어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게 한국녹색성장 국가비전의 개요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NGO에서 뭐라하고 하니, 이 보고서 꼼꼼히 분석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명박 정부가 발표한 문건을 단지 영어로 번역해 놓은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편파적이고 부당한 보고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고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한 말씀만 올리자면 지금 외국 전문가들의 의견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외국 전문가들이 와서 조사하고 권고하는 것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나 그냥 그대로 100% 믿기는 어려운 면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순 의원 그렇지요. 그럼 외국 전문가 말 안 들으면 국내 전문가 말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 정운찬 물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성순 의원 그런데 안 듣잖아요, 일부만 듣지. 반대하는 말은 안 듣지 않습니까, 문제 있는 것은?

이러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총리께서는 4대강 사업이 정말 녹색산업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장기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순 의원 왜 그렇지요? 그 이유가 뭐지요? 왜 녹색산업이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제가 견문이 넓지는 않습니다마는 낙동강의 예를 들자면 낙동강에 실체가보면 참 시커멓게 썩었다 하는 느낌을 갖는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금강을 가보면 이게 강인지 시냇물인지 모

를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림을 녹화했으면 이제 강도 잘 만들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마침 대통령께서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4대강 사업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성순 의원** 그냥 거기 가서 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원인이 뭔가 보세요.

다 지류입니다. 대구의 공단에서 나오는 물이고, 미호천이고 광주의 경우 광주천 영암천 삼포천 이런 데 지천에서 나온 그것을 정화해야지 4대강 보 설치하고 강바닥 퍼내고 그것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녹색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썩었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내기 때문에 녹색산업이다?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요, 수질오염은 수질오염 자체로 문제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가뭄 홍수에 대비도 하고 좀더 넓게 보자면 한국을 그야말로 우리 어릴 때부터 들었던 금수강산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성순 의원** 금수강산 좋지요. 다 그것을 지향하지.

○**국무총리 정운찬** 이제는……

○**김성순 의원** 들으십시오. 녹색산업은, 기후 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이에요. 그래서 첨단융합산업 녹색기술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보를 건설하고 강바닥 파내는 것이 온실가스 줄이는 겁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녹색성장이다 녹색구매다 녹색생활이다 녹색기술이다 여러 가지 개념들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용어를 잘못 선택했는지는 모르지만 산을 푸르게 하는 것처럼 강도 좀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자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고.

제 생각은 지금 의원님 말씀이 다 옳으시지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도 지금 경제위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또 과연 지속적 경제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지만 이제는 한국도 강을 좀 아름답게,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려는 노력을 할 정도의 경제 실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순 의원** 삼천리 금수강산 따지고 그럴 때 옛날 얘기지요. 지금은 G20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UNEP 녹색성장보고서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은 그 녹색이 아니에요. 그냥 강, 하늘 파랗고—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렇겠지만—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를 건설하고 강바닥 준설하면 오히려 녹색성장과는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칭찬하는 소리 좋은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판의 소리도 많이 있어요. 그 분들은 여기 와서 다 보고, 기자나 학자들이 와서 보고 비판한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십시오.

먼저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녹색 도박’이라고 그랬어요. 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은 녹색에 관한 일관된 정의가 없다. 때문에 강둑에 콘크리트를 까는 것도 녹색 뉴딜로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녹색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몰라.

또 조금 전에 UNEP 녹색성장보고서는 그렇고, UNEP에서 나온 지구환경보고서가 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댐에 의한 생태계의 단절과 파괴가 우려된다, 또 하천 관리 과정에 다양한 사회집단의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다양한 사회 집단 참여가 있습니까? 그냥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막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우려되는 점이 많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갖다가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꾸 4대강 사업은 모두 다 비판적으로 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기들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지 모르겠으나 4대강 유역에 있는 분들이 아주 굉장히 적극성을 띠고 사업 규모를 오히려 늘려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영산강에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전남의 박준영 지사님 같은 분은 왜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잘 하느냐를 얘기하자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성순 의원** 4대강은 영산강·낙동강 주변 사람들만을 위한 강입니까? 우리 국민의 73.4%가 4대강 하면 안 된다고, 중단해야 된다고 10월 6일자 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는데 전체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지요.

그리고 의견도 중요하지만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지요. 그러니까 추진하되 방향이 잘못되고 내용이 잘못됐으니까 수정해서 해야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겠습니다.

○**김성순 의원** 그래서 지류 중심으로 해야지 왜 본류를 그렇게 합니까? 나중에 견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데.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지금 사실은 지류가 한 90% 되고 본류가 한 10%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난 10년간 지류 개선을 위해서 한 10조원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순 의원** 지류 개선을 위해서요?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 강 유역의 개선을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대강이라고 해서 4대강 분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류에 대한 관심도 다 갖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순 의원** 그러니까 분류는 할 필요가 없나 이겁니다. 지류를 하면 본류의 물이 맑아지니까. 다만 준설은 부분적으로 몇 군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하자 이거예요,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겠습니다.

○**김성순 의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왜 그냥 마음대로 합니까?

그다음에 또 이 대통령은 난데없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론 들고 나오는데 지난 2일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도 강산개조론 나왔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나왔었습니다.

○**김성순 의원** 강산개조론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뭐, 대강 봤습니다.

○**김성순 의원** 대강 보셨어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성순 의원** 그거 보니까 보 설치하고 준설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그 당시에 그런 개념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김성순 의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도산 안창호 선생을 기리는 홍사단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과 전혀 상반되는 내용으로 도산 선생을 심하게 곡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안창호 선생의 말씀을 왜곡했다’ 이랬습니다.

강산을 보다 가치 있게 하려면 황폐화시키지 말고 금수와 곤충이 번식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가꾸고 보전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생활습관과 정신을 강조했어요. 안창호 선생은 특히 ‘성경에서 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이 회개가 곧 개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대통령과 총리가 좀 그 생각부터 개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으로 결심해서 추진한 것은 맞지요, 이거?

○**국무총리 정운찬** 4대강 사업 말씀입니까?

○**김성순 의원** 예, 국민의 의견 무시하고……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근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총리로 와 보니……

○**김성순 의원** 아니, 6월 23일 날 국토해양부 장관이 그랬어요. ‘4대강 사업은 통치권자가 정치적 결단으로 결심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합니까, 국민적인 의견이 중요합니까, 전문가적 판단이 중요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거기서 정치적이라는 게 아마 보통 말하는 정치적이라기보다는……

○**김성순 의원** 아니, 지금이 왕정시대입니까?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 정운찬** 단호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김성순 의원** 그러니까 뭐래는고 하니 ‘봐라, 경부고속도로 하고 냐더니 잘했다고 그러지 않느냐’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거 이렇게 나가면요, 청개구리 정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 2월 달에 착공했는데 1960년대 말은 고속도로는 최첨단 교통시설이었어요. 다릅니다.

여기서 여당의 원내대표는 또 한술 더 떠 가지고 ‘파나마운하 봐라’ 파나마운하까지 또 거들먹

거려요. 파나마운하 1880년에 착공했습니다. 그 시대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누구를 비난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바쁜 시간에 왜 그래……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지금 현실에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거 하자 이거지.

하천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미국 버클리대학의 렌돌프 헤스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 나도 하기 싫어하는데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깐 그래요.

‘선진국에서 이미 20년, 40년 전에 폐기된 잘못된 방식이다, 물의 자연스런 흐름을 막는 시설은 철거하는 것이 하천 복원의 기본이다’ 이렇게 했어요.

청계천사업 같이 하면 찬성한다고 그러셨지요, 총리께서는 한번?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청계천을 고칠 때의 컨셉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거고요.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김성순 의원 예, 말씀하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저도 공부를 경제학을 했는데 정말 유수의 외국 경제학자들이 한국에 대한, 한국 경제에 대한 평을 많이 합니다. 거기 받아들일 것도 많지만 또 상당히 많은 경우는 그냥 피상적으로 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성순 의원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이예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러나 또 그럼에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 기억이 맞다면 유엔환경연합인가요, UNEP에서 나온 보고서는……

○김성순 의원 예, 지구환경보고서.

○국무총리 정운찬 예,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 환경 측면에서도 굉장히 극찬을 한 부분이, 제 기억이 맞다면 있었습니니다. 그것을 한번 고려해주시고요.

○김성순 의원 극찬이 아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부에서 낸 자료를 그냥 번역한 거예요. 그 목적도 그렇다고 여기 써 있어요.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 의원님 그냥 뭐 바지 저고리겠습니까? 보고서를 번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 고려를 해 가지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겠습니까?

○김성순 의원 청계천사업은요, 중요한 게 인공 구조물을 뜯어낸 것이고 4대강 사업은 인공구조물을 갖다 씌우는 겁니다. 정반대예요. 그런 걸 왜 합니까?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좀 나오시지요.

국회에서 예산심의도 안 했는데 어째서 예비타당성조사도 없고, 이렇게 급하게 착공했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법과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해야 할 부분은 하고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순 의원 예산심의는요? 예산심의 안 했는데 이것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착공했지요? 기획재정부에서 문제 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의돼야 할 부분은 심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순 의원 그러면 깎이면 안 합니까? 취소입니까, 착공? 착공한 것 철회합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 부분은 지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순 의원 그러면 국회 예산심의권을 박탈하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성순 의원 그러면 사실상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사실상도요.

○김성순 의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지요. 답답해서 국민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야겠네.

당초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보 1개에 29억이예요, 약 30억 됩니다. 이것 4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착공하는 것은 얼마나? 보 1개에 3900억입니다. 30억짜리가 4000억 가까이, 3900억으로……

그런데 그게 타당한 얘기입니까? 심의 그때 했으니깐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국회 심의 왜 합니까, 아예 이번에도 하지 말지? 대정부질문 끝나면 바로 심의 들어갈 텐데……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국회 예산결산 심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성순 의원 잘 안 들리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산결산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런 것을 포함한 모든 예산사업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순 의원** 심도 있게 논의해서 삭감되면, 만일 전부 삭감되면 어떻게 하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당연히 삭감되면 삭감된 부분의 진행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순 의원** 그러니까 착공하면 안 되지요. 착공하면 안 되잖아요, 삭감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착공되는 부분은 착공된 대로 예산이,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또 중간에 다음으로 넘어가거나 그렇게 되겠지요.

착공되는 것은……

○**김성순 의원** 그러면 국회 예산심의권은 됩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착공…… 나름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순 의원** 들어가십시오.

국민 여러분!

21세기에 국제경쟁과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각국은 앞다투어 미래성장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70, 80년대식 퇴행적 토건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1990년대 일본과 독일은 토건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장기실업자만 양산한 채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선진국에서는 하천의 인공구조물을 뜯어내고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라인강, 다뉴브강 등 많은 강들도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콜로라도강도 1930년대에 정비사업을 했다가 지금 다시 복원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총 467개의 보와 댐을 철거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 집권한 일본 정부, 56개 댐 가운데 48개의 공사를 중단해요, 56개 계획했다가. 그래서 복지비로 돌립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뉴딜정책도 70%가 복지 관련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 채 오직 통치권자의 정치적 결단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다시 뽑을 수 있지만 한 번 파괴

된 강은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70년 전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김성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진복 의원 소개로 부산 동래구 지역구민 백아흠 분, 그리고 권영세 의원 소개로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단 열두 분이 와 계십니다.

다음은 이진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珍福 議員**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부의장님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동래 출신 이진복 의원입니다.

정부는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도 어둡고 긴 불황의 터널을 빠른 속도로 벗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근간을 이루던 자영업자들의 몰락과 서민층의 고통으로 경기회복 소식이 먼 이웃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유는 왜 일까요?

중국 최고의 고전인 서경에는 민유방본 본고방녕(民惟邦本 本固邦寧), 즉 국민은 나라의 근본이니 국민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안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가장 명심해야 할 사실은 국민이 무너지는데 나라가 온전할 리 만무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여러분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을 지적하고 국민의 소리를 가감 없이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총리, 나와 주시겠습니까?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겠다며 국회의원 비서가 된 이후에 제가 정말 아버지처럼, 아니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따르던 고등학교 은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 은사님에게 제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국회의원 비서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명함을 받아든 은사님이 명함을 던지면서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왜 이러시느냐고 여쭙었더니만 정치하는 놈은 꼴도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거짓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국민을 속

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노여워하셨습니다. 당황스럽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의 세대에는 그런 정치가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 계속해서 정치를 하게 된다면 선생님이 걱정하신 그런 정치는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은사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늘 저 자신을 돌아보며 정치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인 스스로 거짓말과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우리 스스로 제 눈을 찌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중요한 약속을 하신 이후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 상대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약속을 안 지킨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찾아뵙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진정으로 합니다.

○李珍福 議員 보통사람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총리께서 이번 세종시 문제는 왜 그렇게 못 하셨나요?

○국무총리 정운찬 ……

○李珍福 議員 정치는 말이지요, 설득과 납득으로 풀어나가는 게임입니다. 이를 풀어나가려면 정치의 근본은 계산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것을 알고 실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보면 국민의 감정을 정말 상할 대로 상하게 해 놓고 나서 뒤늦게 계산서 들고 다니면서 그것을 해명하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도 그렇습니다.

지방에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지방에 제가 좀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일의 순서가 바뀌었던 것이지요.

세종시 문제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철석같이 약속한 사안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번복해버린다 그러면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국민들에게 쓰라린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겁니다. 정치의 근본도 모르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제가 최초의 말은 임명되기 전에 지명된 날 자유로운 학자의 입장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그후에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그후에 공부를 제가 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 삼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에서 아직 대안이 최종안은 안 나왔지만 그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정치를 좀 알아라, 감정의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珍福 議員 그런데 말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총리가 되시고 난 이후에 총리의 말씀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건 총리가 처음부터 공부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도 세종시에 관해서 전문가들처럼 완벽하게 알지는 못 합니다. 그러나 좀더 내용을 아셨더라면,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말씀을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약속했던 대통령을 포함해서요, 우리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로 모든 정당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 그러면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도리입니다. 국민이 납득하게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종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국회나 국민이 판단을 해서 정말 국가의 백년대계를 걱정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감정 상하는 국민들이 생겼겠습니까? 일을 거꾸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국민을 갈등하게끔 만든 거예요. 우리 국회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나라당 의원끼리도 마음이 안 편해요. 왜 이렇게 불을 지르시는 거예요?

○국무총리 정운찬 최종안을 빨리 내놓겠습니다.

○李珍福 議員 부탁드립니다.

일찍이 공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 없이 세울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학자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라는 이 말 말이지요. 국민이 믿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우선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

해서는 설득과 납득이라는 정치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정책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해야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정부, 진정으로 서민과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도 이 말씀은 동의하시겠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동의합니다.

○李珍福 議員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서 들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 이 영상은 지금 자막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국회법 때문에.

이 영상이 뭐냐 하면 지난 대선 때 지방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던 한 대학생이 눈물 어린 호소로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당부하며 지지하던 연설이었습니다.

총리,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좀 늘어났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안 늘어났습니다.

○李珍福 議員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작년 9월하고 금년 9월하고 비교해 보니까 실업자가 오히려 5, 6만 늘었습니다. 청년실업자라는 건 대개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실업자를 의미하는 건데, 단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청년실업자가 지난 7월에 40만 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32만 명 정도로 내려가고는 있습니다만 2008년 9월에 비해서 2009년 9월이 청년실업자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李珍福 議員 대충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좀 읽어 드릴게요.

먼저 본 의원은 요즘 지역구를 사실 다닌다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들을 만날 때마다 아이 취직 좀 시켜 달라고 정말 아우성들입니다. 어떤 부모는요, '내 팔 하나 잘라서 자식 취직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까지 하소연을 합니다. 정말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취직 잘되는 나라 만들겠다고 약속한 우리 한나라당도 책임져야 된다고 저를 만나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총리! 이구백, 십장생, 삼일절, 취직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주 최근에 들어 봤습니다.

○李珍福 議員 그러셨지요. '이구백은 20대의 90%가 백수이고, 십장생은 10대도 장차 백수다'입니다. 그리고 '삼일절은 31세면 취업길이 막혀

절망에 빠지고, 취직은 시집도 취직이다' 이런 뜻입니다.

과연 이러한 신조어들이 생겨나는데도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실업대책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작년 한 해 동안 몇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까 답 주신 내용은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대개 지금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저런 것으로 해 가지고 한 80만 개 정도는 창출했습니다.

○李珍福 議員 저는 오늘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실업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33만 개의 일자리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6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매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한 50% 조금 넘지요? 점수로 따지면 50점 조금 더 되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저는 50점보다 더 주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세계 경제위기를 예측 못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건데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그나마 잘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50점 주시는 것은 좀 박한 것 같습니다.

○李珍福 議員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李珍福 議員 총리님은 교수 시절에 학생들 학점을 후하게 주신 모양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아닙니다. 굉장히 짜게 줬었습니다.

○李珍福 議員 제가 또 다른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올해 1/4분기 청년 일자리는 21만 2000개가 줄어들었고요. 이는 2003년도 2/4분기에 24만 4000개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위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아주 정말 대단한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07년 매년 6만 8000개의 청년 일자리가 감소하던 것이 이제는 14만 4000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도 사실 우리가 모자랄 판인데요, 출범 전보다 2배 이상 급격히 줄어 들고 있습니다.

2주 전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대기업, 수도권 기업에서 중소기업, 지방기업으로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리, 이 말씀 들으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들은 적 있습니다.

○李珍福 議員 그런데 말이지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 어디 가서 이런 소리 듣기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의 말씀을 국민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대통령이 혹시 현실을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시장 다니시고 그렇게 어려운 곳에 많이 다니셨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십니까?’ 이렇게 여쭙어요.

먹고살 만한 기업들은 전부 수도권에 있습니다. 일할 만한 기업들 전부 수도권에 있습니다. 취업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대기업으로, 수도권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방의 어려운 중소기업들, 정부가 정말 제대로 지원하고 있을까요? 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데 온 자료를 훑어봐도 국책은행이라는 은행들조차도 지방기업들 제대로 대출 안 해 줍니다. 전부 수도권, 대기업들만 대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지방정책입니다.

아니,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통령을 보좌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통령께서는 인력의 수급 문제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학 졸업한 학생들은 많은데, 따라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직업이 있을 텐데 현재 한국 경제에서 수요하는 직업들은 거기하고 안 맞는다는 말씀을 우회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존경하는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는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기업이나 지방도시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것으로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의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경청해서 앞으로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珍福 議員 총리님에게 큰 기대 가지겠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고맙습니다.

○李珍福 議員 우리 많은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출산율이 낮다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저

는 말이지요, 젊은이들에게 직장을 구해 주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나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하려고 그러면 혼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을 하려면 직업이라도 있어야 결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직업 없으면 출산할 수 없다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희망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라도 이 취업 문제는, 청년들의 취업 문제는 정말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될 정책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금융위원장님 모실까요?

상임위원회에서 자주 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셔서 죄송합니다.

좀 더 확실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150만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들……

지금 영상을 좀 보여 줄 수 있습니까?

MBC의 취재파일에 나왔던 인터뷰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이 150만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인들은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600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이 수수료 인하에 대해 요구를 아주 거칠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카드사들은 수수료를 더 이상 낮추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수수료 문제는 한쪽에서만 딱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좀 높은 수수료율이 죽 문제가 돼 있는 것은 저희 정책당국에서도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珍福 議員 그냥 문제 인식만 가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금융위원장 진동수 문제 인식을 가지고,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중소기업이라든지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수수료를 많이 내리도록 그렇게 저희가 정책적으로 유도했습니다.

○李珍福 議員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수수료, 국회가 계속 올려라 내려라 이런 이야기하는 것 이제 마쳐야 될 시기 안 됐습니까?

아니, 우리 정부가 친시장 경제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 수수료 문제는 카드사와 회원 간에 또 가맹점 간에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단체협상권을 아예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친시장적이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은 통제예요, 통제. 금융위원회가 마음먹고 하는 대로 따라오면 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가격 결정에 관한 것은 가장…… 의원님 아시겠습니까마는 시장에서 원래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거고요.

다만 수수료의 가격 결정에 있어서 어떤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정부가 여러 가지로 정책 대응을 해 오고 있습니다.

○**李珍福 議員** 원가 공개도 말입니다. 저는 정말 금융위원회가 재작년 2007년도에 카드사들에게 내규를 만들어서 원가비용에 맞게끔 수수료를 책정해 달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나서도 실태점검 두 차례 하고요. 원가 적정성에 대한 실질적인 검사는 한 차례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당국이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원장께서 국민들에게 정말 카드수수료 시장경제에 맡기고 원가 이것 정말 제대로 산정했는지에 대해서 밝히겠다, 약속을 좀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답변하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의원님, 지금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느 정부보다도 문제 인식을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책 대응을 통해 가지고 어려운 중소기업이라든지 재래시장에 대해서 수수료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고요.

그다음 현재 지금 정부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단체협상권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문제를 지금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 문제 자체는 이렇게 단칼로 딱 잘라서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최선의 방안을 그렇게 찾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李珍福 議員** 저는 참, 위원장으로서 조금

무책임한 답변 같습니다. 국회가 할 일은 당연히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금융당국이 할 일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국회에만 그냥 던져놓고 ‘하겠다’ 이런 말씀은 저는 관료가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것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신용 보증부 대출 하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李珍福 議員**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5.7%가 보증부 대출의 금리가 부당하게 높다고 그러합니다.

아니, 신용보증카드를 끊어서 은행에 가져갔는데 95%라서 5%를 책임을 못 지겠다는 은행에게 100% 보증서를 끊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를 끊어 준다는 이야기는 ‘이 회사가 부도가 나면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것을 충당해 줄 테니까 은행이 돈 빌려 주라’ 이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맞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그렇습니다.

○**李珍福 議員** 그런데 100% 전액 보증서를 준 은행들이 작년 한 해 이 보증부 대출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입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한 2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수익에서 따지면 한 4%도 안 됩니다.

○**李珍福 議員** 2조, 4%요? 그것은 너무 국민들을 호도하는 말씀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이렇게 보증부 대출을 받은 은행들이 이자를 36.6%를 받는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민이 모든 보증을 다해 주고 국가가 모든 보증을 다해 주는데 36.6%의 이자를 받아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의원님, 그 부분은 혹시 다른 의원님들이 오해하실까 봐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를 신보에서 보증하는 것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삼십몇%의 경우가 있었습니까마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경우는 시정이 되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예는 일부, 예를 들자면 80%라든지 85% 이런 정도의 보증을 하는 경우에 대개 그런 이자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李珍福 議員**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에 금융중심지 지정해 놓고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아직 고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예산의 절반밖에 집행은 안 했고요. 회의는 다섯 차례 했는데 세 차례는 서류회의를 했습니다.

이 금융중심지 계속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조만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지난 1월에 중심지 지정한 이후에 지자체하고 세부 개발계획에 대해서 죽 논의를 해 왔고요. 조만간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珍福 議員**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관한 것도 손질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와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장 진동수** 잘 알겠습니다.

○**李珍福 議員** 들어가시지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국토해양부장관님 좀 모실까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증·할인 제도 말이지요. 10t 이상의 화물차만 지금 면제해 주고 계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렇습니다.

○**李珍福 議員** 10t 미만은 왜 안 되고, 10t 아래는 왜 안 되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사실은 저희가 이 제도를 2000년도에 도입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대형 화물차의 통행량을 좀 한산한 심야대로 분산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요.

그동안 경제위기 때문에 유가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소형차들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지난 8월까지 한 1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면제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기름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또 이것을 계속할 경우에 여러 가지 부담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교통정책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하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李珍福 議員** 그런 것 같으면 말이지요. 평균을 했어야지요.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이지 어떻게 특정한 조직만 지원해 가지고 그것을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조직적인 지원보다는 사실은 교통정책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저희는 접근했고요. 의원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복지정책이나 그런 식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李珍福 議員** 지금 이 건에 관해서 말이지요. 6만여 개별화물자동차조합원들이 정부의 정책이 정말 잘못됐다고 말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숙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어쨌든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한번 다양하게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珍福 議員** 꼭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시지요.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조선 의원으로 부족하나마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이명박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영할 수 있는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오늘 대정부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희상** 이진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윤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서해교전 상황 보고

○**부의장 이윤성**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 순서입니다만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속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오늘 오전 10시 33분께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해 5도 대청도 인근 NLL 부근에서 북한 선박과 우리 선박의 교전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선박, 우리 해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만 우선 질문에 앞서서 첫 질문자인 이용섭 의원께서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 제가, 총리로부터 오늘 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받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용섭 의원 예.

○부의장 이윤성 총리 나오셔서 상황을 아시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서해교전에 대해서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상황 보고이고 둘째는 관련 후속조치이고 끝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11월 10일 11시 27분경 서해 대청도 인근에서 북측 경비정 2척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NLL을 월선하자 우리 측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이 있었습니다. 이에 북측이 우리 고속정에 직접 공격을 해 옴에 따라 우리 측이 응사함으로써 교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측 피해는 없으며 북측 경비정 한 척이 화염에 휩싸인 채 북으로 귀환했습니다. 그것이 11시 40분이었습니다.

관련 후속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1시 반에 대통령 주재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서 지금 개최 중입니다. 총리실의 국무총리실장도 이 회의에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합참에서 상황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는 국회 국방위의 비공식 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벌어진 서해교전은 우발적 충돌이었습니다. 국민은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은 우리 국군과 정부를 믿고 변함없이 일상생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윤성 총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발표는 정부에서 요청한 건 아닙니다. 제가 시작 전에 이런 중대한 상황은 우리 국민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보고가 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님 소개로 지역구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광산읍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지역주민 마흔 한 명이 오셨습니다.

윤영 의원 소개로 경남 거제 지역구민 68명,

예순여덟 분이 오셨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소개로, 가족 분들이 오셨군요. 방청석에 가족 분, 식구가 다섯 분이냐 와 계십니다.

1. 경제에 관한 질문(계속)

(14시16분)

○부의장 이윤성 이용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민주당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출신 이용섭 의원입니다.

바로 총리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는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총리직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취임하기도 전에 세종시 문제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발언하면서 사회적 통합에 앞장서야 할 총리가 지역간·계층간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과거 정부와 국회에서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나온 결론입니다. 취임도 하기 전에 전문성도 없는 총리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해도 될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총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총리님, 재검토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또 9월에 말씀드릴 때도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을 더 잘되게 보완·개선하자는 것입니다. 또 세종시 원안을 폐기하거나 백지화하겠다고 한 번도 또 누구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원안을 보완·수정하게 될 때 그것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 사과하고 양해를 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은 더 잘되게 하는 것을 또 더 잘되게 하는 방안이 없나 하는 것을 고민하고 모색하고 또 발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보완·개선안을 내놓았을 때 국민이 그리고 또 충청인이 그대로, 그것도 좋지 않으니 그래도 원안대로 하자고 하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현재의 입장입니다.

○이용섭 의원 그러나 행정에는 원칙과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취임하시고 나서 관계 공

무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신중히 결정해서 얘기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내정되자마자 그렇게 발표를 해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초래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 정치 관행에 익숙지 못해서 좀 불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섭 의원 그것은 정치관행이 아니고 학자라고 하더라도, 지조와 양심을 지켜야 할 학자라고 하더라도, 공직자라 하더라도,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지켜야 될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가 세종시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한번 더 정리를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현재 보기는 국가적으로 볼 때 행정적 비효율이 아주 많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지역을 개발해서 하나의 도시로 만들자면 그 도시가 자족기능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세종시는 지금까지의 계획으로는 자족기능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족기능을 좀 더 늘리자, 그래서 원안보다는 조금 다른 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것을 국민과 또 국회와 또 충청인들에게 보여주고 한번 평가를 받아보자 이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이용섭 의원 총리가 얘기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네요. 하나는 정부기관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 두 번째는 자족성의 부족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문제도 참여정부에서 생각지 않고 추진을 했을까요? 이것은 보통 사람이라면 30분만 생각하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공직자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족성 얘기를 하는데, 총리는 9월 21일 날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의 자족도가 6~7%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산출근거가 뭐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자족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느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느냐는 것인데 현재 세종시에 관해서 계획된 것을 보면 산업이나 상업이나 또 학교 등을 볼 때 그 면적이 6.7%~7% 정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적 기능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용섭 의원 총리가 생각하는 적정 수준의 자족도는 얼마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해 본 결과를 보면 한 20% 정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 의원 자족도가 높아지면 그러면 정부기관 이전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그 문제를 떠나서 자족기능 지역을 넓히는 것조차도 다시 의논해야 됩니다. 계획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용섭 의원 총리실에서 누가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리가 말씀하신 6.7%는 잘못 계산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용지 중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상업업무지역, 산업지역, 업무지역, 대학지역을 합하면 6.7%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다른 용지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대학 이외의 교육시설, 체육시설, 특히 의료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이런 시설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이런 시설 합하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11.4%입니다. 이 11.4%가 낮은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신도시 자족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뭐 도시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용섭 의원 평균이 8.7%입니다. 성남 판교 신도시가 7.7%, 김포 신도시가 5.9%, 인천 검단 신도시가 7.2%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11.4%입니다.

그리고 이 자족도가 꼭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세종시 자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공원녹지가 53%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종시를 기획할 때 시민들이 쾌적한 도시에서 살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비율을 놓치면 자족도시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족도시가 떨어지면 여러분이 그것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것입니다. 행정을 중심으로 하되 자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복합도시로 만든 것입니다. 왜 그런데 본질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이미 계획되어 있는 지역에 다른 기능을 가지는 시설들을 유치하는 것만도, 다시 말해서 그런 정도의 계획의 변경만도

법에 관한 논의도 해 보고 다른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대로 집행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말씀을 제가……

○이용섭 의원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성 확보 방안’이라고 하는 건설교통부 용역보고서 읽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봤습니다.

○이용섭 의원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보지는 않았습지만, 자족기능하고 자립기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용섭 의원 거기에 청사진이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중앙행정, 문화·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 지식기반, 6개 주요 기능을 가진 도시로 발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발전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유로 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다른 도시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깊이 있게 하세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왜 그렇게 서두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자면 지금 행정부처 이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한 계획이 되어 있지만 그 외 지역의 개발이라고 그럴까 그 외 지역……

○이용섭 의원 발전시키십시오, 총리가.

○국무총리 정운찬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추상적이고 선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섭 의원 그래서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그냥 어느 지역에, 맘먹었다고 어느 지역에 뭐 넣고 다른 지역에 뭐 넣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용섭 의원 참여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달리 다음에 올 정부를 불신하고 모든 것을 자기 정부에서 끝내려고 하지 않았습디다. 정부는 계속 가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처럼 22조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도 자기 정부에서 끝내려고 하는 오만과 독선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지요. 다음 정부가 왜 필요합니까? 구체화시키라는

거 아닙니까? 구체화시키면 되지 왜 그것을 그렇다 해서 본질을 바꾸려고 그러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계획된 것으로서는 자족기능을 가진 신도시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용섭 의원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현재도 11.4%로 다른 신도시보다 훨씬 높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이용섭 의원 다시 찾아보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찬반을 떠나서 짧은 시간에 하자고 하는 것은 우선 길게 되면 공사비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 또 하천공사의 특성상 단기간에 해야 된다 그런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어느 분의 학설이에요, 그게? 아니, 공구별로 나눠서 하면 되지 30조라고 하는 돈을 3년 동안에, 서민들은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사느냐 죽느냐 생존을 걱정하는데 거기다 1년에 10조씩 쓰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국가하천은 이미 준비율이 96.4%입니다. 하려면 지방하천, 소하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또 이따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임기 말에 나라 살림이 파탄 지경에 이르는 국가 재정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대 중반에서 유지하겠다고 중장기계획 발표하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용섭 의원 그렇지요? 가능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용섭 의원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결국 한편으로는 2013년, 14년 되면 경기가 회복이 되어서 세수가 많이 들어 올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원 개발 등을 통해서 세수를 늘리고 또 지출 측면에서 불요불급한 것을 줄일 뿐만 아니라 한시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은 다시 시작하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의원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나? 균형을 이루려면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용섭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미 수입 쪽에서는 90조라고 하는 세금을 깎았습니다. 그러면 지출이라도 덜해야 하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가 발표한 굵직굵직한 주요 사업만 보더라도 이미 405조에 이릅니다.

이것을 이명박 정부의 임기로…… 그것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만 봐도 110조입니다. 그러면 세금은 90조 깎고 써야 될 금액은 110조가 늘고 이미 200조라고 하는 재정적자 요인, 국가채무 증가 요인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013년에 재정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국가채무를 30% 중반대 유지한다는 말씀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2013년, 14년에 가서 유량 개념으로 세입과 세출을 맞추겠다는 것이지 국가채무를 없애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섭 의원 아니, 30% 중반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용섭 의원 안 되는 것이고요. 되는 것만 추진하세요.

나라 살림이 어려우면 적자재정을 편성할 수도 있고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총리님, 국가채무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이용섭 의원 많이 늘었는데, 얼마 늘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에 좀 약합니다. 제가 그 정확한 숫자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의원 내년도에 국가채무는 407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108조가 증가한 것입니다. 표에 나오고 있습니다.

1인당 국가채무도 내년이 되면 833만 원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국민들은 모두 833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216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너무 빨리 증가하

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만, 의원님!

○이용섭 의원 예.

○국무총리 정운찬 작년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도 아주 경제가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경예산 등을 통해서 경기부양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는 점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쭙 보겠습니다.

총리는 경제학자니까, 내년도 예산이 긴축예산입니까, 확장예산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참으로 절묘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늘리기는 늘리는데 별로 안 늘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아직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확장은 시키지만……

○이용섭 의원 아니, 긴축입니까, 확장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확장……

○이용섭 의원 우선 얼마 늘지는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조그만 규모의 확장입니다.

○이용섭 의원 왜 확장이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용섭 의원 몇 % 늘었습니까, 금년 예산 대비?

○국무총리 정운찬 작년…… 한 3% 정도는 것 같습니다.

○이용섭 의원 추경 대비 3.3%가 감소하고 본예산 대비 2.5%가 늘었습니다.

내년도 성장률을 얼마로 봤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한 3%에서 4% 사이……

○이용섭 의원 그러면 학자들은 성장률보다 더 늘어나야 확장이고 줄면 일단 긴축으로 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늘면 그게 확장입니다.

○이용섭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산은……

○국무총리 정운찬 추경에 비해서는 안 늘었지만……

○이용섭 의원 본예산 대비해도 2.5%밖에 안 늘어났다고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이 확장이 아닙니까?

○이용섭 의원 아니, 성장률이 4.4%이고 불변성장률이 6.6%인데, 2.2%인데 그것 늘어난 것이 확

장정책은 아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주 조그만 규모의 확장이다 또 절묘한 선택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용섭 의원** 총리가 틀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경제위기 때문에 국가채무가 늘어났다는 말, 재정적자가 늘어났다는 말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재정적자가 늘어났느냐? 내년에 추정보다 3.3%가 줄고 본예산 대비 2.2%밖에 안 늘어났는데 국가채무는 407조이고 재정적자는 32조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지출 쪽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그건 세입 쪽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용섭 의원** 세입 쪽의 문제입니다.

내년도의 경상성장률이 6.6%이면 국세는 누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7~8%가 늘어나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상 국가채무가 몇 % 늘어났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국가채무요?

○**이용섭 의원** 아, 국세수입이……

○**국무총리 정운찬** 그건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 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용섭 의원** 국세수입은 2.8%밖에 안 늘어났 습니다. 왜 경상성장률은 6.6%인데 국세수입은 2.8%밖에 늘어나지 않았을까? 조세 재정수입 조 달기능이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90조라고 하는 세금을 깎으면서 조세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원되지 않으면 앞으로 재정적자, 국가채무는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효석 의원 질의에 존경하는 윤 증현 장관님께서도 ‘경제가 어려워서 그랬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문제는 국가채무가 실제보다 턱없이 과소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정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8년 기준으로 1439억 원, 정부가 발표한 309조보다도 거의 5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국재정학회는 정부가 발표

한 3배 수준인 863조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다른 여러 가지 경제 개념도 그렇지만 국가채무 개념도 철학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86년도에 작성된 IMF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기업채무라든지 또 보증채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채무에 집어넣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현금주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몇몇 OECD 국가에서는 이른바 발생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기준보다 좀더 넣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지급금이라든지 선수금 같은 것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현금주의 방식에 추가해서 우리나라도 OECD 등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것을 2012년부터는 채택해서 국가채무를 계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IMF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의원** 그러면 지금 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IMF 현금주의를 버리고 OECD 발생주의로 전환하고, 사실상 정부가 부실화되면 부담해야 될 공공 부문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어느 정도 될까요?

○**국무총리 정운찬** 훨씬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섭 의원**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 보시는 것처럼 2008년 기준으로 정부는 309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국가가 부담해야 될 공기업 쪽을 더하면 국가부 채는 601조로 늘어나게 됩니다. GDP 대비 58.7% 입니다.

이것을 좀더 넓게 폭을 넓히면 광의의 국가부 채 기준으로 가면 이한구 의원께서 주장하는 1823조 비슷한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국가채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쓸 일만 생각하지 국가채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내년에 우리 국가채무가 얼마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숫자?

○**국무총리 정운찬** 현재는 400 정도라고 그러셨

습니다.

○**이용섭 의원** 407조라고 얘기했지요. 이 407조를 이 기준에 의해서 정부가 사실상 부담해야 될 공기기업까지 포함하게 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850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GDP의 77%가 됩니다.

이제 2012년에 발생주의로 간다고 하니까 그때가 보면 ‘아, 이 의원의 그때 지적이 옳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OECD 평균 기준보다는 아직도 낮습니다’ 이런 얘기 하실 수 없다는 얘가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이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OECD 방식, 다시 말해서 발생주의 방식도 공기기업채무 등 정부채무가 아니거나 또 보증채무 등 확정채무가 아닌 것은 거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재 하는 기준에 OECD 기준인 미지급금, 선수금만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국가채무에 대해서 어찌 걱정이 없겠습니까? 걱정은 있으나 이것을 대외적으로 크게 부풀려서 말해 가지고 불안을 가져다 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래전부터 하던 방식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무슨 감추려 한다거나 축소하려고 한다거나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용섭 의원** 총리 지식은 좀 알은 것 같아요.

공공기관을 포함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분식회계라고 들어 보셨지요? 그거 설명 한번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분식회계요?

○**이용섭 의원** 예.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을 꼭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이용섭 의원**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분식회계는 모든 것을 밝히지 않은 회계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은 감추고 어떤 것은 더하고 하는 식입니다.

○**이용섭 의원** 그렇지요.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조작하는 것입니다. 분식회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금세탁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용섭 의원** 솔선수범해야 될 정부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분식회계와 예산세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총리, 4대강 사업 규모가 얼마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22조……

○**이용섭 의원** 22조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용섭 의원** 그런데 22조가 너무 많다고 얘기하고, 한나라당에서조차 4대강 때문에 아무런 사업도 할 수가 없다, 이러니까 정부는 슬그머니 22조 중에서 8조를 수자원공사에 넘겼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분식회계입니다. 재정적자,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넘긴 겁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수자원공사는 돈 부담만 하고 다시 국토해양부로그 사업을 넘겼습니다. 이게 예산세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조를 다 집어넣는다고 하면 국가의 사업에 여러 가지 주름살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일단 수공에 일부를 넘기고 수공은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해 가지고서 원금을 다시 회수하도록 하는 것이고, 수공이 직접 안 하고 국토부의 어떤 지방개발청이든가요? 거기다 맡긴 것은 수공의 인력상 현재 그 일을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정부가 해야 될 사업은 정부가 하고 공사가 해야 될 사업은 공사가 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자꾸 정부가 해야 될 사업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공공기관으로 이렇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현실에서는 공공기관까지 포함해서 국가채무를 잡는 게 타당하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사실상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공공 부문이 하는 경우에는 우리처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사상 최대의 토목사업인 4대강 사업을 국민 70% 이상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를 시작도 안 했는데 3조 3000억이 들어가는 15개 보에 설치공사를 착공하는 변칙과 편

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4대강 사업 규모는 말씀하셨지요? 얼마라고 그러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22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용섭 의원 22조?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용섭 의원 화면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은 자꾸 4대강 사업을 16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9월 9일 청와대에서 정몽준 대표하고 오찬에서도 4대강 살리기 예산이 16조인데 자꾸 22조라고 얘기하는데 제발 이 말씀 좀 안 하고 여기 계신 한나라당 의원님들, 정부에서도 우리 총리처럼 22조라고 알고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가들이나 야당 시민단체에서는 이게 22조보다 훨씬 많을 거다, 30조는 되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마 그분들은 일반적으로 공사가 시작한 후 마칠 때까지 공사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는 이 공사는 50% 이상을 턴키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턴키 방식으로 하면 이 공사비를 공사가 진척됨에 따라서 공사 주체들한테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사 주체가 다 맡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비판은 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단기간에 공사를 끝내기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나는 여지도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용섭 의원 시민단체나 전문가나 야당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 표를 보시지요. 정부가 줄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22조에 포함 안 된 사업들이 이곳저곳 도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8조 원 떠넘긴 것에 대한 이자보전 1조 1000억 원 이런 것을 다 합하고 간접연계사업을 합하면 30조가 넘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 시점에서 4대강 사업의 정확한 금액을 파악해서 국민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혼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제가 의원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의원님께서 예산 심의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용섭 의원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4대강 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빨리 심의되기를 바라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 의원 그러면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표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4대강 사업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숫자를 보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기획재정부장관님도 잘 보십시오. 지금 온 게 어떻게 와 있냐, 낙동강 수계 시설비 1조 8608억 원, 낙동강 수계에 11개 하천이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인지 준설을 하는 것인지 보 설치를 하는 것인지 수질을 개선하는 건지 아무 것도 없이 1조 8000억 내놓고 우리한테 심의해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총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저것 가지고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자세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보내셔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용섭 의원 보내셔야 되겠고, 그리고 9월 21일 날 청문회 할 때 존경하는 이정희 의원 질의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까지 안 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그 당시에 지식이 짧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해와 관련된 것은 예비타당성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용섭 의원 그 말씀도 엄청나게 틀린 말씀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무리 선한 권력도 견제받지 않으면 부패하고 남용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선한 정부도 아닙니다.

언론악법을 불법 처리하고,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몰아붙이는 정의롭지 못한 정권입니다.

90여 석의 야당 의원들로는 정부 여당의 독주와 불법을 견제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국회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예산주권운동을 펼쳐서 나서 주셔야 됩니다. 이제 수백t의 옳은 생각보다도 1g의 정의로운 국민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이용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운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의원 경남 거제시 출신 한나라당 운영 의원입니다.

오늘 멀리 거제에서 우리 국회를 방문해 주신 위대한 거제시민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감사합니다.

○운영 의원 제 생각으로는 4대강 사업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만 우리나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명박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께 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장관님, 한강종합개발을 82년부터 86년까지 하셨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습니다.

○운영 의원 그때 신곡과 잠실에 보를 설치하고 준설을 한 후에 수질이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오히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질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의원 제 생각으로 수질은 수량과 오염원의 차단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설치 동시에 하고 계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아주 상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운영 의원 그러면 강바닥을 준설해서 수량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각종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4대강 사업의 중요한 목적인데 어찌해서 수질이 더 나빠지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제시해 주신 말씀을

들으면 보를 설치하면 물의 유속이 느려지니까 물의 수질이 나빠질 것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물이 더러워지느냐 나빠지느냐의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오염원을 제대로 차단하느냐는 문제, 또 갈수기에도 사시사철 항상 물이 충분히 흘러야만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비록 보를 설치하더라도 수질은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운영 의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지천을 정비하지 않고 4대강만 정비해 봐야 홍수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큰 강을 먼저 정비하는 것이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바닥을 준설을 해서 지천의 수량을 큰 강이 품을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바다가 많은 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적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습니다.

○운영 의원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지형상 산이 높아서 홍수가 쉽게 나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량을 과장을 해서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기후 온난화 영향으로 기후 변화와 강수량이 종잡을 수가 없지요?

하루에 1년치의 강우량도 쏟아집니다. 8월에 대만에는 태풍 모라꼿으로 3000mm라는 기록적 강우를 기록했지요?

4대강 사업은 홍수로 인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국민의 생명과 막대한 재산을 예방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1년에 몇십조의 돈을 들여서,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전쟁에 대비해서 몇십조의 예산을 투입하고 수십만의 아들딸들이 국방의 의무에 종사하고 있지요? 그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역시 저희가 지금 이 4대강 사업을 착안하게 된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강우라든가 진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강우로 볼 때 그동안 나름대로 손을 대고 한다고 했습니다. 다마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태풍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강둑이 터져서 피해가 나면 복구하는 데는 대책 없이 돈을 집어넣습니다. 다마는 그때 당시 항상 여론이나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후진국적인 투자를 반복할 것이냐, 우리도 이제 선진국과 같이 미리 재해 예방에 투자를 해서 터지는 것을 막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엔 이 사업은 바로 복구 위주가 아니라 소위 선진국형 예방 위주로 투자를 함으로써 진폭이 큰 이런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상당히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겨서 이것은 예산 세탁이고 분식회계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동의하기 참 힘듭니다.

공기업인 수자원을 만든 목적이 뭐지요?

(이윤성 부의장, 김형오 의장과 사회교대)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정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대행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공기업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 의원** 수자원공사는 정부의 정책을, 특히 수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정부의 공기업입니다. 그 공기업에서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다음에 지난 참여정부에서도 복지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수조 원의 도로건설 예산을 갖다가 도로공사에 넘겼지요? 그것도 분식회계고 예산 세탁입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것은 국가의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 의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도, 이미 세종시에 4조 6400억을 토지주택공사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도 분식회계고 예산 세탁입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토지주택공사가 하나의 사업주체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분식회계가 아닙니다.

○**윤영 의원** 공기업과 정부는 서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원을 배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든 국가가 공익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기업이 수행하게 하든 그것은 선택의 문제지 결코 그것을 갖다가 예산을 떠넘긴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4대강 예산이 16조가 아니고 22조라는 주장도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 예산과 환경부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사실 이 사업은..... 좀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환경부의 수질개선사업이라든가 농림수산식품부의 저수지 개량사업들은 이미 해 오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되는 사업이 아니어서 사실 저희로서는 순수하게 새로 추가된 4대강 사업비로 보지 않고, 저희 국토해양부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순수하게 들어가는 15조 4000억을 저희 나름대로는 4대강 순수 사업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마는 광범위하게 해석한다면 22조 2000억도 포함됩니다. 순수하게 4대강으로서 새로 추가되는 예산이 15조 4000억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윤영 의원** 그런 부처 예산은 4대강 사업이 아니라도 연례적으로 정부 부처가 하고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대강 사업 예산 때문에 복지예산 교육예산 기타 여러 예산이 감축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구개발 예산도 금년에 비해서 내년엔 늘고 그다음에 복지예산 증가율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렇습니다.

○**윤영 의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다마는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이미 4대강 예산을, 착공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제 상식으로는, 저도 공무원 좀 해봤습니다. 다마는 아마 추경에서 확보한 계속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장관님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렇습니다.

전에 질의에서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마는 사실은 상황대로, 사실대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금년에 우리 4대강 사업을 위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 83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추경이라든가 수정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이 반영된 예산을 토대로 해서 이 4대강 사업은 계속공사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속공사비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 해 연도는 의회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또 그 예산이 반영이 되면 계약하는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씀드리어서 이미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착공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윤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대강 사업은 맑고 푸르고 아름다운 강을 우리 국가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면 국민들께서 다소 의심을 할까 하는 생각을 제가 깊이 해 보았는데 아마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의 전초전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대운하 사업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을 위한 전초전입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전혀 아닙니다.

○**윤영 의원** 예.

대통령도 분명히 국민이 반대하시기 때문에 대운하 사업은 안 하겠다고 공언을 하셨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습니다.

○**윤영 의원**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의심하지 않도록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국민들께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4대강 유역에 있는 지역주민이나 지자체에 계신 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많은 사업을 더 추가하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정확히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알려드리는데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정말 이 사업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정말 좋은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분기에 GDP 성장률이 2.9%를 기록해서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금년에 사상 최고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엇그제 IMP는 G20 중에서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가장 많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세계은행은 금년에 한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장관님과 여러 국무위원들과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빠른 경제 회복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감세와 재정금융 확대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정부는 이번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국제공조 체제하에서 세 가지 분야의 정책을 중심으로 경제를 운용해 왔습니다.

첫째는 확장적 거시경제 운용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라고 그래서 재정지출의 확대와 감세, 그다음 금융정책에 있어서의 소위 수량적 이완정책을 통해서 거시금융정책에 있어서 유동성 공급 확대, 그다음 통화정책에 있어서 금리의 하향을 포함한 신축적인 통화정책, 이런 세 가지 분야의 정책이 조합이 돼서 경제를 운용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체 국민의 합심된 노력이 가세가 돼서 이런 좋은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윤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경제의 회복 성과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데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이나 국가부채 문제, 부자감세안 문제가 많아서 제가 한 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료를 좀 비춰 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국가재정이 지금 현재, 우리 중앙정부의 재정 추이를 보면 GDP 대비해서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서 결코 높지 않고 금년에 확장적 재

정정책으로 인해서 다소 나빠졌지만 내년에는 또 양호하게 바뀔 것으로 보이고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을 봅시다.

G7 국가의 재정수지 현황과 한국을 비교해 봐도 G7 국가는 2009년 현재 -7.6%인데 한국은 -5.0%입니다.

다음, 국가채무 현황으로 봐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금년에 365조 정도 됩니다.

다음, G7 국가채무 현황을 보아도 우리나라는 GDP 대비, G7 국가의 평균이 2009년도에 101%인데 우리는 35.6%입니다.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

다음, 그래서 하도 이명박 정부에 빛이 많이 늘었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국가채무 추이를 보니까 참여정부는 5년 동안에 165조가 증가해서 145%가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33.1조 원이 증가했고 이명박 정부는 3년 동안에 108조가 증가해서 36.2%가 증가하고 연평균 36.1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규모로 보아서는 조금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GDP 대비 규모를 보니까 참여정부 5년 동안에 연평균 GDP 대비 2.4%가 증가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GDP 대비 2.1%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 참여정부는 40년 만에 세계 호황기였지만 지금 미증유의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GDP 대비 국가부채의 규모가 참여정부보다 작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건전성이나 국가채무 규모를 매우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장관님, 왜 이런 논란이 생기고 있느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채무가 OECD 국가의 평균으로 보나 참여정부의 기준으로 보나 결코 나쁘지 않은데 국가채무를 800조니 1000조니 하는 이야기가 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국가채무나 국가부채의 범위에 대해서 국가별로, 또 국제기구에서의 기준에 약간 상이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가채무의 범위나 규모를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축소해서 국민들을 속여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다

른 국제기준이나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국가채무까지 같이 합산을 해서 정도 이상의 국가채무가 부풀려져서 국민들을 필요 없이 불안하게 하거나 나라의 앞날을 어둡게 투영되도록 국제사회에 하는 노력은 똑같이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 의원 그 문제를 조금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 구조는 IMF의 GFS 1986을 기준으로 하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습니다.

○윤영 의원 그렇지요?

OECD는 SNA 199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흔히 말해서 IMF도 2001년부터는 OECD 방식으로 일치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히 OECD가 각국의 채무 국제 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개념이 '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준에 비유해 보면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부채의 규모에 대해서 국민들의 쓸데없는 불안이나 논란의 종점을 이제 가져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서 글로벌 기준에 맞는 OECD 기준으로 국가의 채무를 산정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습니다.

○윤영 의원 현재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작업을 진행 중이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영 의원 언제쯤 완료가 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2012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 의원 그래요.

빨리 해서, 국제 비교 개념인 OECD의 '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도 전문가들 사이에 공감대가 있는 부분도 있고 공감대가 없이 논란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전문가들 사이에 공감대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빨리 명확히 해 주고 나머지는 필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국가채무 규모에 관해서 소모적인 논쟁이 없도록 신속하게 기획재정부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의원님 말씀에 하나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는 IMF 기준에 의해서 발표되는 우리 국가채무의 GDP에 대해서 30% 중반 또 작년 같은 경우는 30%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나라에서 또 외국에서도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저희들만의 주관적이거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윤영 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 확대나 경기부양 정책을 하는 가운데 각 기업들의 자구적 경쟁력 확보라는 기회를 감소시켰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 이런 부분도 미국에서 이미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없도록 기업 구조조정이나 공기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제 생각으로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나 국가채무의 건전성이 결코 선진국보다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빚을 좀더 내더라도 일자리 창출이나 실업률 하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정부는 이번 위기 이후에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기업 구조를 포함한 구조조정을 철저하게 해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든지 여기에 맞춰서 또 공기업에 대한 모럴해저드 방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공기업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든지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자리 창출은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증유의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맞이해서 모든 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지향점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주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의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거기에서 절대로 예외일 수가 없고요.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결국 경제가 회복이 되어야, 일자리는 결국은 민간인이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견인되도록 정부로서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 의원**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고맙습니다.

○**윤영 의원** 교수하시기보다 힘드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인정합니다.

○**윤영 의원** 우리 국민들이 기대가 많습니다.

학자로서도 훌륭하시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했는데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원자바오 총리처럼 민심도 수렴해서 우리 국민들의 이 아픈 마음을 쓰다듬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총리가 되셔야 합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윤영 의원** 그래서 우리 이명박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빨리 익숙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의원** 제가 사전에 준비한 중요한 질문을 전혀 시간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얽혀 있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 규제개혁위원장으로서는 각종 규제완화 작업을 총괄하시지요, 총리께서?

○**국무총리 정운찬** 중단하라고요?

아, 총괄이요?

○**윤영 의원** 예, 총괄하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윤영 의원** 대통령께서도 규제의 전봇대는 반드시 뽑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경제 분야의 전봇대는 몇 개 뽑았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가슴 속에 멎들어 있는 규제의 전봇대는 1개도 뽑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혹시 우리 국민들의 토지에 규제가 어느 정도, 숫자가 얼마나 되고 규제의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기억이 안 납니다.

○**윤영 의원** 지금 얼마 안 되었으니까 잘 모르시겠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위에 얽혀 있는 규제의 종류가 그린벨트, 수산자

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해서 총 326가지 규제가 얹혀 있고 그 규제의 면적이 10만km², 우리나라 국토를 넘습니다. 이 정도로 무지막지한 규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규제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이중 삼중의 규제가?

○국무총리 정운찬 아무래도 국토가 좁다 보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 의원 일응 타당한 면도 있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고통을 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국가 우월적인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을 쉽게 하려고 책상 위에서 죽죽 그어 놓고 국민이 불만하고 항의하면 우리 촌 말로 거렁뱅이 동냥 주듯이 하나 두 개 푼다는 것이지요.

우리 공직자들이 그것이 자기의 땅이라면 그렇게 이중 삼중의 규제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앞으로 탁상공론식 행정을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 의원 어떤 규제가 필요하겠지요. 필요하지만 우리 자본주의 이념에서 사유재산권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 균형을 맞추어야 되지요.

그래서 앞으로 고통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규제 개선 대책을 추진해 주시고, 이것이 화려한 수사가 아닌 진정으로, 서민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토지이용 규제, 이중 삼중의 규제를 잘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나 이 정부에 대해서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꼭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 의원 이 외에도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이라든지 연안자망어업에 관한 질문이라든지 조선·해운 산업 지원이라든지에 대해서는, 하지 못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또 정하균 의원의 소개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대한산재장애인연합회, 장애인 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단체 등 60인이 또 방청을 왔습니다.

이 중에는 25인이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정하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균 의원에게는 국회법 제122조2의제3항에 따라 질문 시간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균 의원 본질문에 앞서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발언대에 올라오는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발언대가 좁아서 휠체어 돌리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발언대 또한 장애인에게 맞게 설치된 것이 아닙니다. 발언대가 높고 발언대 앞이 비어 있지 않아서 가까이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원고 또한 들고 있지 못해 프롬프트를 설치 요구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굳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언급하지 않아도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기 1년 반이 넘게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유감입니다.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친박연대의 정하균 의원입니다.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를 보통 행복지수로 표시합니다. 이 행복지수로는 미국 미시간대 로널드 잉글하트 교수의 세계 가치관 조사가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 세계 가치관 조사로 행복지수를 측정해 보니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국민소득 1만 달러를 갓 넘었던 시기에 비해 2만 달러를 돌파한 때가 오히려 조금 덜 행복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당시 도이치뱅크 연구소의 국가별 행복지표 보고서에서도 OECD 국가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10년 사이 행복지수가 하락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6년 영국 민간 경제연구소 신경재단의 행복지수에서도 세계 178개 국 중 102위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OECD 팩트 북에 따르면 자살률 높은 나라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낮게 나오고 자살률이 수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일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정부는 물질적 풍요에만 몰두한 채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에는 너무 등한시해 온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행복지수 상승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상대적 빈곤 해소를 위한 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데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4대강 사업 중에 본격적으로 몇 군데가 착공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내일…… 오늘이 며칠…… 예.

○정하균 의원 예, 오늘 했고 내일 모레 또 하고 마저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4대강 문제, 세종시 문제는 잠시 미루고 저와 함께 소외받는 계층, 특히 장애인들의 현안에 관해서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정하균 의원 혹시 장애인들 차량의 연료를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정하균 의원 차량……

○국무총리 정운찬 차량, LPG……

○정하균 의원 왜 LPG를 쓸까요?

○국무총리 정운찬 LPG가 좀 싸서 쓰는 것 같습니다.

○정하균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LPG를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에 일정한 부분을 보조해 주고 있었는데 그것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정하균 의원 그 문제를 우선 짚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정하균 의원 장애인 차량 LPG 세금 인상분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올 연말로 종료됩니다. 이것에 관해서 장애인들의 불만이 많은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고 있습니다.

○정하균 의원 예, 지금부터 장애인 차량 LPG 세금 인상분 지원사업의 배경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정하균 의원 예, 제가 장애인이라서 발음이 좀 어눌합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죄송합니다.

○정하균 의원 양해 바랍니다.

잘 못 들으시면 다시……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정하균 의원 질문을 하면 다시 답변하겠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 1990년도 5월부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해 상대적으로 연료인 LPG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말 외환 위기가 닥치자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비장애인들에게도 LPG를 사용하게 허용했습니다. 단지 SUV라고 하는 차량에 한하여 허용을 했습니다.

SUV 차량이 어떤 건지 아시겠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스포츠 유틸리티 비히클(Sport Utility Vehicle)이라고 하는 거지요.

○정하균 의원 예.

이에 따라 비장애인의 SUV 차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휘발유 사용 차량이 줄어들어서 세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세율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경유와 LPG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인상 방침이 기존의 LPG를 사용하던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2001년도 7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결제한 LPG 결제액 중에 예전과의 가격 차액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되돌려 주는 장애인 차량 LPG 세금 인상분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정하균 의원 정리를 하자면 비장애인 차량의 LPG 허용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LPG 세율을 올리게 되었던 것이고, 이에 따라 장애인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올리 기 전 가격으로 LPG를 살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이 지원 사업은 장애인들이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덜 내도 될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냈다가, 다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해합니다.

○정하균 의원 그런데 지난 참여정부 때—당시 유시민 장관 때—의 일입니다. 장관님이 부임하시 고 나서 업무보고를 받던 중에 장애인 복지 예산의 거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는 LPG 지원 사업이 있는 것을 보고 장애인 복지 예산과 LPG 지원 사업의 예산이 너무 차이가 크다, 즉 LPG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승용차를 갖고 있는 사람에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 차가 없는 사람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시간을 두고 없애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유가 LPG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고소득 장애인 이니까 이것을 줄여서 차 없는 저소득 장애인에 게 지원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아주 엉뚱한 논리를 펴며 이를 점차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그 시한이 올 연말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정하균 의원 여기서 정부는 두 가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LPG 세금 인상분 지원 사업 예산은 LPG 차 소유 장애인이 더 낸 세금을 돌려주는, 성격이 다른 별도의 예산인데도 이를 일반회계의 장애인 복지 예산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정하균 의원 둘째,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현실에서 차는 보장구 차 원이고 생계수단의 차원이므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의 자동차를 마치 사치품으로 취급하며 차 없는 장애인과의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장애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음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동 휠체어의 가격이 약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모두 고소득층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이라고 해서 고소득층으로 보는 것은……

○정하균 의원 아니요, 전동 휠체어……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정하균 의원 장애인이 타는 차 중에 100만 원도 안 되는 중고차도 많은데 이들도 과연 고소득층이라고 합니까?

전동 휠체어나 자동차나 장애인에게는 일종의 보장구입니다, 보장구. 전동 휠체어가 없었다면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습니다.

차 가진 장애인을 무조건 고소득자로 단정하고 차 없는 장애인과의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아주 무지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차량을 소유했다고 해서 고소득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중고차 타고 다니시는 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균 의원 이렇게 어리석은 논리에 따라 정부는 기존에 진행되어 온 장애인차량 LPG 세금 인상분 지원 사업을 올해 말로 중단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장애인들은 더 분을 못 참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나간다면 LPG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들이 2001년도 7월 이후 현재까지 약 8년 가까이 급격히 인상되어 온 세금 폭탄을 내년 1월부터 한꺼번에 맞게 됩니다. 정부가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개선하고 지원해도 부족할 판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앞세워 장애인에게 세금 폭탄을 떠안기려는 것이 더욱 더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여당과 정부는 지난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아주 운운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지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외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의 가장 잘못된 이 사업을, 정작 이 사업에 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를 않고 왜 이것이 폐지되는지 제대로 논의해 보지도 않으면서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존경하는 한나라당 정몽

준 대표께서는 이 문제점을 바로 인식하시고 지난 10월 13일 장애인 행사 때와 14일 한나라당 최고연석회의 석상에서 내년 예산에 LPG 지원 사업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리와 장관들은 이 문제를 바로 알지 못해 바로잡지 못했지만 새로 오신 정운찬 총리께서는 이 잘못된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저의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 생각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잠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을 고소득층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정부의 입장을 한번 물어봤더니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과의 형평성 때문에 장애인 차량 LPG 세금 인상분 지원 사업을 개선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하균 의원 총리님, 제가 장학퀴즈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잘 모르시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써 준 그런 논리를 그대로 읽지 마시고 총리님의 견해를……

충분히 생각하실 기회를 주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국무총리 정운찬 글썄, 현재 일단 현 상황을 좀 파악하고 나서 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 차량 LPG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것도 맞는지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2006년 당시 장애인들과의 협의 내용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금년 말로 폐지를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정부는 2007년 장애인 차량 LPG……

○정하균 의원 총리님, 그것 다 아는 얘기니까 그것을 그대로 읽지 마시고……

○국무총리 정운찬 그런데 지금 저……

○정하균 의원 총리의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총리님의 저번의 행동을 보고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실망을 만회할 기회를 제가 드리려는데 그렇게 그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게 아니고, 지금 모르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길지 않습니다.

(김형오 의장, 이윤성 부의장과 사회교대)

어떻든지 간에 하나 확실한 것은 올해…… 첫째로는 정부의 입장은 뭐냐 하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부의 입장은 LPG 지원 제도 완전 종료 이후에도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와 소득 보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나날 계획이다, 이런 것인데 정몽준 의원하고 말씀 나눴다고……

○정하균 의원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그 자금은 장애인들이 LPG를 사용했기 때문에 생긴 자금입니다. 만약에 장애인들이 LPG를 사용하지 않으면, 즉 장애인 차가 LPG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돈, 재원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더 내고 도로 가져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 말씀은 혹시라도 LPG 지원사업이 끊긴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받으시던 지원은 줄이지 않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라는 말씀……

○정하균 의원 지금은 총리께서는 ‘한나라당 대표께서도 이렇게 내년도에 지원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정부에서 그 뜻을 충분히 받아서 앞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공무원들이 써준 대로 읽지 마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 제 답은 있어요. 제 답은 지금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제 답입니다만 저도 이 문제를 좀 이해를 하고 또 여기 실상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정하균 의원 자료를 미리 드리고, 공부해 오시라고 제가 미리 드렸는데, 지난 금요일에 드렸는데 전혀 공부를 안 하셨네요.

○국무총리 정운찬 공부가 부족하다면 죄송합니다.

○정하균 의원 장애인들은 LPG만 사용하면 안 됩니다. LPG 통을 트렁크 뒤에 다 달거든요. 그러면 공간이 비좁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휠체어 등 여러 가지 보장구를 실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LPG만큼 같은 비율로, 휘발유를 사용하건, 경유를 사용하건 같은 비율만큼 감면해 주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면세유, 유종에 상관없이 사용할 때 장애인들을 일정한 부분 같이 면세하라고 하

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 장애인 여러분들한테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총장 할 때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의 입학을 허용한 것도 있고 또 사실은 제가 시각장애인의 도움을 많이 받고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정하균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13만 척수장애인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84만 산업재해 장애인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당사자로서는 최초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산업재해 장애인의 문제가 곧 제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와 관련한 법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지만 현재 이 법은 보상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재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 지원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보상보다는 재활에 주력하여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에의 재통합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산업의 역군으로 열심히 땀 흘려 국가에 기여하다가 장애를 갖게 된 준 국가유공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그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국가유공자로 대우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준 국가유공자로 대우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사고로 장애인이 된 분들보다는 오히려 좀더 많은, 한 차원 높은 예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배일도 의원도 대표발의한 이러한 법이 있었습니다만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었고 이번 18대 국회에서 산업재해 장애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이것도 제 이해가 모자라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준비해 온 것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장애인의 경우, 틀리면 말씀해 주십시오, 산재보험법에 의해 보상 및 재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 관련 법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산업재해 장애인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저희 동료들의 의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틀렸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틀렸다면.

○**정하균 의원** 저는 예우에 관한 법을 제가 발의하는 데 총리님의 생각이 어떤지 물어봤는데 총리님의 답변만 해 주시면, 충분히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대로 읽지 마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제 답은 아까 첫 번째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고……

○**정하균 의원** 예, 동의하시는 거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정하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이것은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하균 의원** 시간이 짧아서 또 총리님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연금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연금제도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총리님, 지난 11월 2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장애인 집회가 열렸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들었습니다.

○**정하균 의원** 장애인연금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존에 없던 장애인연금을 신설하여 주겠다는데 왜 그들은 추운 날씨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서 목소리를 높여 가며 집회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현재 지원받는 것으로서는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정하균 의원** 잘 못 들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현재 지원받는 것으로서는 생활이 어려워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정하균 의원**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연금액이 너무 적다는 것이고, 둘째는 경증장애인을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장애인들은 이번의 장애연금을 ‘깎값 연금’ 혹은 ‘깍떼기 연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장애수당을 받던 중증장애인들이 이 연금으로 전환되면서 더 받는 금액은 단돈 2만 1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깎값이고 기존의 수당에서 간판만 바꿨기에 깍떼기 연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연금 도입에 따라 지자체에서 몇만 원씩 더 없어 주던 장애수당마저도 없어질 수 있어서 오히려 연금 도입으로 인해 종전보다 더 적게 받게 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복지부의 예산 요구안에서는 장애연금 총액이 3239억으로 제시되었으나 그마저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가 대상과 단가를 낮추면서 1519억 원으로 깎아 버렸습니다.

장애인계에서는 2002년도부터 장애인연금공대위가 결성되었으므로 장애연금 도입은 7년 동안의 장애인계의 숙원을 담은 것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이 고작 이런 깎값 연금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장애인들이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금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소득 보전이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정하균 의원** 장애연금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만든 장애연금법 대상은 중증장애인들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정하균 의원** 문제가 없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썬요. 지금 의원님이 세 번째로 지적한 문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연금지급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너무 적다, 또 지금 대상 범위를 중증뿐 아니라 경증장애인한테도 확대해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하균 의원** 예.

○**국무총리 정운찬** 그래서 저는 의원님이 지금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첫째 번, 두 번째는 말씀드렸고, 세 번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이것은 우선 시작이 반이

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가 대상을 넓히는 것과 금액을 증액시키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하균 의원**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대상을 늘리고 시작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것을 더 원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정하균 의원** 예.

○**국무총리 정운찬** 그러면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하균 의원** 이거야말로 예산에 맞게 정책을 만드는 게리맨더링의 전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고맙습니다.

○**정하균 의원** 기획재정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정하균 의원** 빈곤동등성장률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정하균 의원** 2000년도 이후에 연도별 성장률과 빈곤동등성장률의 변화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준비됐습니까?

화면을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0년도 이후에 연평균 성장률이 2.64%인 반면에 빈곤동등성장률은 평균 0.35%로 나왔습니다. 즉 그 기간 동안에 빈곤층의 소득증가가 빈곤층의 소득증가보다 훨씬 낮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연도별 상대빈곤율과 지니계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도 이후에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 빈곤이 악화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무리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빈곤 문제는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정부는 경제가 어려워

지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경제적 취약계층인 중소기업이고요, 경제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 또 제일 마지막에 혜택을 보는 것이 역시 경제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하균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고난이 있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조금만 더 참고 노력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만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상대적 빈곤감의 해소 없이는 희망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국민은 희망을 주는 정부를 원합니다. 부디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 미래에의 희망을 갖도록 정부와 여당이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정하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신 분입니다.

30세까지는 서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신 분입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전동차에 앉으신 분입니다. 장애인과 함께하고 권익보호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정하균 의원의 각오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10분 더 드렸습니다.

지금 강석호 의원님 소개로 해서, 지역구가 굉장히 깁니다. 경상북도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의 주요 당직자만 오셨는데 137분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강석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윤성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4개 군의 지역구를 둔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와 주신 우리 지역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된 초선의원이지만 어설픈 기성정치인, 또 무조건 위압적으로 정

부 부처를 몰아세우고, 무례한 정치선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당·야당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선거에 지면 야당이고, 선거에 이기면 여당 합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서로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토론 후 마지막 투표로 결과에 따르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잘못된 선택이었다면 다음 선거에 우리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선거 결과에 따라 또 입장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반대만을 위한 반대, 찬성만을 위한 찬성 보다는 우리 모두가 이성적으로 행동해서 서로 존중과 품위를 지키는 것이 국민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폭력과 온갖 욕설이 난무하고, 몸싸움을 하며, 깨고 부수고 이 모든 행동은 우리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국토해양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감사합니다.

○**강석호 의원** 수산업 토대가 되는 어장과 해양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양환경은 우리 국토해양부, 어장환경은 농수산식품부에서 구분 관리하고 있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장관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분명히 현재까지는 의원님 지적대로 약간 업무가 분리돼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약간의 부처 간의 견해가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호 의원** 장관님, 최근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생명자원관리법을 제정하려고 하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습니다.

○**강석호 의원** 장관님께서도 우리 해양생명자원과 수산생명자원이 분리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여러 가지 업무상황에 따라서 분리하는 가능합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수산 이외의 자원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호 의원** 장관님 말씀은 우리 정부 업무분장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생명공학육성법 제13조제3항을 보니까요, 이 부분은 우리 농림수산식품부가 해양수산물자원을 총괄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처럼 우리 정부가 해양생물자원을 인위적으로 수산자원과 분리하지 않고 수산과 해양환경을 한 부처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국민에게는 큰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구태여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또 나름대로 같이 한다면 효율도 올라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과 저희가 생각하는 사항을 같이 절충해서 최선의 대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호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농림수산식품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장관님, 오늘 질문 처음이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예, 처음입니다.

○**강석호 의원** 심심하셨겠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다.

○**강석호 의원** 장관님, 우리 농림수산식품부 입장에서 해양생명자원과 수산생명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방법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아까 국토해양부장관께서도 말씀 있었습니까마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원만하게 논의를 해서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호 의원** 예, 사실은 결국 바다에서 대형 선박의 사고가 나면, 특히 기름 유출, 또 지난 여름에 해양환경 변화로 인한 해파리떼 출몰 등을 본다면 결국은 대부분의 바다의 피해는 어민들이 입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예, 어민들하고 깊은 관련이 있고요. 또 그것을 가장 예민하고 그것의 이해와 손익이 직접 관련되는 것은 어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석호 의원**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몇 가지 더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미 FTA, 한·EU FTA 아직 체결은 안 됐습니까마는 이 한미 FTA와 한·EU FTA가 체결이 된다면 가장 피해 품목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예, 한미 FTA하고 한·EU FTA 하게 되면 우리 축산 쪽에 영향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일부 과수 부분에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동안 보완대책을 충분히 했고요. 또 추가 보완대책도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구조조정 문제나 소득피해에 대한 보완대책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호 의원** 그래서 그 보완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지금 한미 FTA의 경우에는 보완대책이 이미 2년 전에 이루어져서 지금 일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 조건을 달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유보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정부에서 착실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만일 비준이 된다고 그러면 비준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U FTA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연말 전후해서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호 의원** 예, 그 보완대책 안에는 많은 구체적 사항이 포함되어 있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그렇습니다.

경쟁력을 제고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과 직접적인 피해보상 부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강석호 의원** 장관님, 저는, 본 의원은 반드시 국가를 위한 이 FTA 체결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선대책 후비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예, 충분한 그런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강석호 의원** 장관님 그리고 현재 우리 남북어민에 대한 현황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남북어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런 송환이나 이런 관계는 또 관계부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정보나 또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호 의원** 아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몇 명이 있고 현재 상황은 어떻고 지금 추진계획은 어떤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제가 정확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한 6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호 의원** 이 부분은 우리 장관님께서도 물론 외교통상부라든지 다른 부처가 있지만 담당 어민은 우리 농수산식품부장관님 소관입니다. 그 점도 유념을 하셔서 하루속히 이 문제가 조속 해결됐으면 하고요.

또 더불어 바다의 날도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어민의 날도 제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예, 어민의 날 제정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국무총리님.

총리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총리님 이렇게 처음 뵈었을 때 미국의 아주 유명한 미남 영화배우가 떠오릅니다. 더스틴 호프만하고 상당히 많은, 그 미남이시라고……

○**국무총리 정운찬** 고맙습니다.

○**강석호 의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제 별명이 더스틴 정입니다.

○**강석호 의원** 예, 그렇습니까?

총리님, 아까 국토해양부장관님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님 그 말씀 잘 들으셨죠?

○**국무총리 정운찬** 예.

○**강석호 의원** 그래서 지금 아마 국무총리실에서 입장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해양수산부가 분리되면서 해양부분은 국토해양부, 수산부분은 농수산식품부, 이런 데 업무를 분리한 데서 발생된 문제점입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썄요, 지금 저도 해양 분야와 수산 분야의 범위와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그 소관 범위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 의원** 예.

본 의원의 생각은 해양부분은 해양광물개발 또

해상운송 등 물류부분은 국토개발과 함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해양생물자원을 포함한 해양생태계, 해양환경 부분은 우리 수산업의 기반이 되는 것이므로 수산행정과 일원화시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산과 해양을 동일 부처에서 다루는 것이 또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립해양대기청에서는 해양과 수산을 함께 관장을 하고 캐나다의 해양수산부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위해서라도 수산청이나 수산해양청으로 통합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간 농식품부하고 국토부의 기능 및 업무……

○**강석호 의원** 농수산식품부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농수산식품부…… 죄송합니다.

농수산식품부하고 국토부의 기능 및 업무에 대해서 정밀한 분석을 전제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총리실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하나 조직 신설보다는 새 정부 들어서 개편된 조직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으로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은 없을까 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석호 의원** 예, 잘 고찰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강석호 의원** 됐습니다.

들어가지죠.

○**국무총리 정운찬** 고맙습니다.

○**강석호 의원** 다음은 기획재정부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 이제 내년 8조 6000억, 그런데 이로 인해서 이제 중산 서민·복지·교육·일자리에선 또 지역 SOC사업 등 미래성장동력 예산이 크게 축소된다고 많이들 우려를 하고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장관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당정협의 등을 해 오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각 지방의 SOC 사업이 줄 것이 아닌지 또 각종 복지 이런

예산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제기됨에 따라서 정부로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예산지출 증가액보다 3배 이상 증가하는 비율을 배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지방의 SOC사업도 금년도 본예산 수준보다도 더 많은 양을 배정을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예산편성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강석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수도권을 규제완화 발표를 하면서 작년에 5+2 광역경제권별 활성화전략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30대 선도프로젝트, 국책사업 선정 또 향후 5년간 50조 원 투자, 이렇게 되어 있죠?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강석호 의원 이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적기에 완공이 가능토록 재정을 투입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거기의 그 부분에서 특히 광역경제권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지금 경제성 플러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제권 간의 형평이라든지 잠재력 이런 것을 감안하려 한 뜻으로 그렇게 취지를 이해를 합니다.

지금 30대 선도프로젝트는 그런 것이 다 감안되어서 선정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30대 선도프로젝트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석호 의원 예, 한 예로 저희 경상북도 지역의 선도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국도 36호선이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이제 선도프로젝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본 의원생각은 선도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타당성의 또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아마 제 기억에 그것이 아마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개별적인 사항은 지금 의원님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호 의원 예, 왜냐하면 국가재정법 시행령 2조10항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알겠습니다.

○강석호 의원 또 국도36호선이 다른 구간은 다 4차선인데요. 유독 마지막 남은 구간 41km는 또 2차선으로 갑니다. 이 부분도 아까 그 부분과 맞물려 있습니다.

저는 이 국가 선도프로젝트 선정 의미를 제한하면서 이걸 가지고 능률이다, 비능률이다 말하는 것도 국가 균형발전정책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죠.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그 수많은 프로젝트 중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프로젝트를 제가 기억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것이 유감입니다.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무슨 변경이 있으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 없는 변경이나 지체는 우리 행정에서 지금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번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호 의원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됐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님!

자꾸 불러내게 해서 송구합니다.

장관님, 제가 준비한 동영상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국의 고속도로 현황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 특히 경북북부 지역, 동해안은 고속도로가 하나도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대단히 이렇게 고속도로 사업이 편중돼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 교통정책을 책임지는 장관님으로서 이 그림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사실은 평소에 경북북부 지역하고 동해안지역의 교통이 여러 가지 지역 발전에 있어서 많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 지역에 대한 그런 교통시설 확충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석호 의원 저희 동해안과 경북북부 지역은 수도권과 서남해 중심의 국토발전전략에 밀려 교통의 오지로, 개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대표적인 낙후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22년째 공사 중인 포항—삼척 간 국도 7호선, 12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는 국도 36호선, 46년이 걸려도 완공하지 못한 울릉도 일주도로 등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내용 아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잘 알고 있습니다.

○**강석호 의원** 얼마 전에 한승수 국무총리께서 신문에 남기신 글이 생각이 납니다. ‘국무총리 재직 시 우리나라 전국 150여 곳을 다녀 보았다. 전국을 다녀 보니까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이 과잉투자된 지역과 부족한 지역을 저절로 알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장관님 과잉투자된 지역은 어디고 부족한 지역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뭐 느낌으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국가 균형발전이나 이런 차원에서 일을 해 온 입장에서 어느 지역이 과소고 어느 지역이 과잉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서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북 북부 지역하고 동해안권 지역 이쪽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데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강석호 의원** 제가 2009년도 국토해양부 업무편람에 있는 고속지도를 보니까 국도 36호선이 자동차전용도로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렇게 끝자락인 봉화—울진 간 구간이 4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이 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 이것은 4차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작년에 교통량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기준에 따르면 1일 한 1820대 정도 나와서 이 정도의 교통량이라면 2차선으로 되겠다는 생각에서 4차로를 전제로 하되 우선 2차로로 건설을 하고 앞으로 교통량이 7000대 이상 늘어나게 되면 바로 4차선으로 확장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교통량 처리에 문제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강석호 의원** 장관님, 이 도로는 과거에 공병대가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 그 공사로 인해서 순직한 그런 구간입니다.

이 도로 말고 현재 많은 주민들은 도로가 이러니 다니지를 아니하고 강원도로 다 둘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차가 다니지 않는 도로에 아무리 교통량을 조사를 해본들 교통량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국도 36호선 다른 구간은 아까처럼 다 4차선인데 유독 봉화—울진 구간만 2차

선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제가 울진—봉화 구간을 당초대로 선도프로젝트 국가사업이므로 4차선으로 확장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간 의견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석호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감사합니다.

○**강석호 의원** 다음은 우리 지식경제부장관님, 오늘 질문 처음이시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강석호 의원** 우리 최경환 장관님은 참 국회의원 시절에도 후덕하시고 아주 업무에 밝으시고 또 국회의원들 사이에도 덕망이 높으시고 또 지역구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잘 계셨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석호 의원** 장관님, 원자력 유리화 시설 알고 계십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석호 의원** 원자력 유리화 시설이 폐기물 부피를 최대로 축소시키는 새로운 처리 방식 또 국내에 처음 도입된 신규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강석호 의원** 그래서 저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단순히 반입하고 처분하는 그런 처분장과 방사성폐기물을 소각 유리화 처리하는 그런 원자력의 경우에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안전하다고 봅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지금 안전심사를 엄격히 거쳐 보니까 안전 면에서는 두 방식이 큰 차이 없이 둘 다 안전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피가 많이 줄기 때문에 나중에 방폐장 저장시설 용량 이런 부분들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제성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기존의 방식하고 유리화 설비는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하는, 일단은, 그런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경제성 면에서는 두 방

식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 설비는 아주 최근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인 10월 26일 날 울진에만 시범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운영 성과를 전체적으로 한번 봐서 이 부분에 대한 종합평가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호 의원 참 한수원이 대단한 우리 국가의 애국자들입니다, 이 고유가 시대에.

그런데 문제는 말이지요. 유리화 시설이 소각·용융 과정을 거치면서 배출될 수 있는 위험 물질, 코발트, 세슘,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은 위험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더불어 경제적 효과와 또 위험 부담에 대한 그런 부분을 더불어 우리 정부가 발전세와 같이 그지역주민들에게는 소각세를 신설해주는 것도 옳다고 보는데 우리 장관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조금 전에 답변 올린 대로 이 부분은 설치해서 불과 10월 26일 날 첫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성과를 봐서 경제성이나, 안전성은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일부 지역주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한 안전심사를 거쳤습니다. 안전성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게 무슨 소각세가 됐든 아니면 다른 형태가 됐든 거기에 따르는 절감되는 예산을 활용해서 어떻게 원전 주변의 피해를 받는 데에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호 의원 이제까지 정부는 원자력발전소를 기피 시설로 인정하면서 자치단체에 이에 상응한 보상이나 대책은 세워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신울진 원전 4기를 건설하기 위해서 정부가 약속했던 8개 선결사업에도 아직 약속을 지켜주지를 않습니다. 10년째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장관님, 정부가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우리 특히 울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울진 지역은 원전 부지를 많이 제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주 저렴한 그런 발전원을 쓸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추가로 건설을 할 그런

계획을 협조를 해 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지원 방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전 건설과 관련한 지원사업은 특별지원금이라고 그래서 건설비의 한 2%에 해당되는 지원을, 지역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울진이 기존의 2기가 건설되고 있고 추가로 더 건설하면 4기가 되는데 1기당 예를 들어서 한 3조 이렇게 잡으면 한 12조 원의 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만 해도 한 2400억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건설 단계에서 해 주고 있고 또 발전 단계에서도 다양한, kW당 얼마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특별 지원 사업비 여기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발전사업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또 하나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울진지역의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한수원과도 협의를 하고 있고 정부 관계부처 간에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용역이 필요한 그런 사업도 있고 또 관계부처 협의도 필요한 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석호 의원 장관님, 지금까지 영광 고리 월성 울진 등 원자력을 건설하는 곳마다 안전성 문제로 지역주민과 큰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화 시설에 대한 불안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발전소를 받아준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정부도 그에 상응한 보상과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석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하여 정부는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였고 해당 지역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후되고 소외되고 지지부진했던 국책사업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지역 중에서도 개발이 아주 뒤떨어진 제3의 사각지대라고 불리는 농어촌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물론이고 산부인과,

병원 응급실조차도 없고 도시가스·상수도 시설, 없고 부족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교육 문제와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고 나이 든 어르신들만 남아 힘든 농사와 어업 일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만 늘어나는 오늘날 우리 농어촌의 현실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는 왜 우리 지역은 이렇게 낙후되었을까 하는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명박 정부는 지방과 수도권이, 정부가 각자 역할 분담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부가 약속한 기반시설이라도 갖추어 줘야 하는 것이 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는 자유무역, 혁신, 행복, 자유도시, 기업 등 공공기관의 유치, 바라지 않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부분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강석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 현안 챙길 것 다 챙긴 것 같습니다.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의원** 존경하는 이윤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시흥 을 출신 조정식 의원입니다.

오늘은 4대강 사업이 착공되는 날입니다.

역사는 오늘을, 망국적 4대강 사업의 착공일이자 환경 국치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우리 민족 반만년 삶의 터전을 3년 만에 파헤쳐 되돌릴 수 없게 훼손시키는 망국적 토목사업입니다.

정부 스스로 국토 대개조 사업이라고 칭하는 무려 22조 원이 투입되는 사상 최대의 토목사업을 이명박 정부는 3년 내에 끝내겠다고 합니다.

오로지 정권 임기 내 완공만을 위해 법과 절차도 무시하고 환경평가도 졸속으로 끝내고 국민 여러분도 나 몰라라 하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대미문의 졸속 사업으로 치러지는 4대강 사업은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망국적 국가의 대재앙 사업이 될 것입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이제 총리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지요? 두 달

가까이 되시나요?

○**국무총리 정운찬** 안 됐어요. 9월 29일부터니까 지금 한 40일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조정식 의원** 핏수로 두 달이네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국무총리 정운찬** 많이 모릅니다.

○**조정식 의원** 많이 모르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래서 혹시 그것을 물어실 것이면 국토해양부장관께서 더 잘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조정식 의원**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렇게 자신 없으신가요?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요, 디테일한 것은 제가 모르는 게 많습니다.

○**조정식 의원** 그러시면 총리하지 마셔야지요.

총리가 답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4대강 사업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와 함께 이명박 정부 최대의 현안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대강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총리께서 하신 말이 있습니다. 현장에도 다녀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과연 이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지 총리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 의원**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합니다.

총리, 토목건설사업에서 돌관 공정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국무총리 정운찬** 강행 공사, 강행 공정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조정식 의원** 그렇지요. 이 돌관 공정이라는 게 지난 60년대 70년대 개발독재 시대에 주로 쓰던 토목건설 공정입니다. 말 그대로 납기일 정해 놓고 그러니까 완공기간 정해 놓고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밤낮으로 속도전을 밀어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대형 토목사업에 돌관공사를 하게 되면 안전관리는 물론이고 부실시공 그다음에 환경문제는 아예 뒷전에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법과 절차는 아예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오로지 납기일 완수만이 '돌격 앞으로' 지상명제가 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90년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것 보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94년인가……

○조정식 의원 왜 무너졌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설계나 시공이나 나중에 유지 관리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조정식 의원 결국은 부실공사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습니다.

○조정식 의원 그런데 부실공사는 왜 일어났겠습니까?

비용 절감하려고 시멘트 덜 넣고 그리고 준공 기일 맞추기 위해서 콘크리트 양생기간 확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 자체가 부실해진 것이지요. 그리고 무너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무리한 돌관공사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정부가 지난 6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천일의 약속’ 4대강아 깨어나라!” 이렇게 커다란 플래카드를 붙이고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그것 보신 적 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1000일만에 4대강을 살리겠다는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의원 이 ‘천일의 약속’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돌관공사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전에 보다는 지금 우리가 공법을 비롯해서 기술이 많이 발달했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계획을 잘하고 또 감리도 잘하기 때문에 사정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정식 의원 총리, 일반적인 턴키 입찰 시에 설계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설계기간요, 그것은 역시 경우에 따라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조정식 의원 일반적인 턴키 입찰은 90일입니다, 90일. 그런데 4대강 사업은 60일 만에 했어요. 그런데 4대강에 보를 설치하고 준설하는 작업은 우리 역사상 처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3년 내에, 2년 내에 전 공구에서 동시에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런 것은 설계 시공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60일

만에 딱딱 해치우고 오늘 착공에 들어간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어떻게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국무총리 정운찬 글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 분야의 기술 수준이나 그동안 축적된 경험이 그것을 막아 주리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의원 총리님께서 잘 모르시면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기대부터 하시는 거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이미 계획된 것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조정식 의원 총리, 입찰 공고를 하면서 정부에서 공사기간으로 내놓은 게 780일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뭐라고 했느냐면 시운전 기간, 공휴일, 동절기 이것 다 포함해 가지고 780일 안에 끝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강 사업상장마라든가 홍수가 나면 공사를 못 해요. 그렇게 되면 780일 아니, 600일 안에 이것을 다 해치워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실제로 이 같은 사업 규모를 갖고 있는 전문적인 하도급업체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처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공구를 동시에 다 시작을 합니다. 인원도 없어요.

그리고 준설토 처리 문제 이것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무리한 공사로 인해 가지고 안전사고 발생합니다. 환경 피해 발생합니다. 결국 4대강 사업은 21세기판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의 재판으로 갈 것입니다.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총리께서 그런 답변하셨어요. 공사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하천공사 특성상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어떤 공사든지 시간을 끌면 공사비가 올라가는데 턴키의 경우에는 계약할 때 공사비를 이미 정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 의원 총리, 저는 그 답변 누가 써 줬는지 모르겠는데요.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그것은 써 준 게 아닙니다.

○조정식 의원 참 정말 창피한 얘기입니다, 창피한 얘기에요.

사업에 최소한의 기본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구간이 짧은 철도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이 최소 10년에서…… 경부고속철도 10년 걸립니다. 광역철도 사업 20년 걸립니다. 그리고 이런 4대강 사업 하려면 최소한 준비기간이 4~5년 걸린다는 게 통설입니다. 10년 이상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장마 때 휩쓸려 가니까 빨리 끝내야 된다, 그럴 거면 사업 왜 합니까? 단계별로 착실하게 해야지요.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이 돌관공정을 국민을 속이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말씀한 데 대해서 동의는 합시다만 사업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수행방식이라든지 예산 투입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정식 의원 제가 총리께 무겁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21세기 국가의 미래지향적 CEO가 아니라 60년대~70년대에 그런 돌관공사를 지시하던 건설회사의 CEO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총리는 그 총대를 메고 있는 겁니다. 현장 소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경고하건대 이런 대형 졸속사업은 반드시 큰 대형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우리 후손에 대해서 그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총리, 질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총리께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만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걱정하고 우려하는 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면서, 오늘 착공에 들어갔는데 이 4대강 사업의 시작은 하천 준설하고 준설토 처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준설토 처리하는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준설……

○조정식 의원 준설토 처리.

○국무총리 정운찬 예.

○조정식 의원 혹시 이번 4대강 사업에서 준설토 처리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마 보고 받으셨을 겁니다, 많이 논란이 됐기 때문이에요.

5억 7000만㎡입니다. 남산의 11배 크기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준설토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이 4대강 사업과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국가하천 사업을 하면서 준설토 처리를 지자체에 떠넘겼습니다. 맡겼어요, 지자체 보고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지금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환경부에 따르면 준설토는 악취와 해충이 발생 합니다. 그리고 침출수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골재를 팔아야 되거든요.

정부에서는 지자체에다가 이 준설토 적치장을 당신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서 그다음에 나중에 골재 판매해서 회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이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 의원 지금 정부에서 준설토 적치 기간을 보통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한번 잠깐 보세요.

그런데 본 의원이 해당 지자체로부터, 여러 군데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준설토 적치 예상기간이 최장 38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 해당되는 지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핵심 구간인 경상북도의 고령, 성주, 구미, 예천, 안동 그다음에 경기도 지자체 평균 적치 기간이 무려 2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것 확인 못 해 보셨지요?

일례로 예천군의 예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천군에서 처리를 하도록 맡겨진 골재량이 658만 9000㎡인데 실제로 예천군이 지금까지 연간 소요하는 양은 20만㎡입니다. 자그마치 33년 동안 이것을 갖다가 적치했다가 회수를 해야 돼요.

이거 지자체에 정부가 떠맡기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이 적치 기간이 장기화 되게 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악취라든가 해충이나 침출수 오염이나

비산면지나 이런 게 다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준설토에 대한 적치장은 대부분 농경지에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현행 농지법에서는 이것을 농지를 일시적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게 3년 플러스 3년 해서 최장 6년이에요. 지금 정부가 무리하게 일을 벌이면서 엄청나게 많은 준설토를 갖다가 그것을 한 다음에 지자체에 떠맡기고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범법 행위까지 지자체에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다른 지역에 그것을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정식 의원 예?

○국무총리 정운찬 다른 지역에 골재를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정식 의원 총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엄청난 양을 2년 내에 쏟아내는데 그것을 어디서 다 소화를 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썽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의원 사업비 하나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사업비.

○국무총리 정운찬 예?

○조정식 의원 사업비에 관해 얘기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비.

지금 22조 원 든다고 그러잖아요? 간접사업비까지 연계하면 30조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업비 더 늘어날 거라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총리?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가 봐야 알겠지만 저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의원 자신 있으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조정식 의원 그러니까 자신은 없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런 겁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정식 의원 4대강 사업비 중에 토지보상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손실보상비가 있어요. 정부에서 국토부가 마스터플랜 발표했을 때 여기 책

정한 보상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토지보상비가 1조 원, 영농손실보상비가 5000억 원입니다. 합이 1조 5000억 원이에요.

그런데, 저기 저쪽에 자료화면 보시지요.

본 의원이 어렵게 자료를 구했어요. 북한강과 섬강 구역에 대한 조사자료 입수해 보니까, 입수해서 분석하니깐 마스터플랜 계획 시에는 처음에 278억 원이라 그랬는데 이 토지보상비가 1084억 원으로 3.9배가 증가했습니다. 보상면적도 3배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영농손실비도 2억 7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자그마치 29억 원으로 11배가 늘어났어요.

(이윤성 부의장, 문희상 부의장과 사회교대)

자, 이것을 전체적으로 추계를 하게 되면 토지보상비와 영농보상비가 늘어나는 게 8조 원이 넘게 됩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의원님이 인용하신 보상 관련 금액은 기본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감정평가 결과 최종 금액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조정식 의원 조금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보기에 전체 보상금액은 당초 계획과 같이 1조 5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조정식 의원 아니, 여기 마스터플랜 나온 것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정부에 이 자료를 다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렵게 몇 개 입수를 했습니다. 이 자료 다 내놓으세요. 이 자료 다 공개하실 용의 있어요? 보상비 어떻게 다 늘어나는지?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학에서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 공개하시겠습니까?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겠어요?

(「공개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당연히 공개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사업이 엄청나게 벌어지면서 여기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늘어날지, 이것이 국가적인 파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의원은 이것에 대해서 수조 원이 늘어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자료를 내놓고 반박을, 설명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모든 행정은 기본적으로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는 저희 동료들과 의논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조정식 의원**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의논해서 한다는 게? 있는 그대로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정부가 자신이 없고 떳떳하지 못해요? 총리께서 그런 태도를 보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른 부처의 장관들 국회에다 자료 제대로 내놓겠어요?

○**국무총리 정운찬** 아까도 물으셨지만 제가 이런 일을 맡은 지 오래 안 돼서 아주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미숙합니다. 그래서……

○**조정식 의원** 이것은 미숙의 문제가 아니지요. 있는 사실을 공개하라는 거예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런 것들이 국가이익이라든지 또는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조정식 의원** 이 문제가 어떻게 국가이익과 개인의 재산권과 관계가 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의원** 참 답답하시네요, 말씀하시는 게.

○**국무총리 정운찬** 괜찮다면 국토부장관께서 대답을 대신……

○**조정식 의원** 아닙니다. 이것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시간이 너무 제한돼 있는데, 수질 문제 하나만 짚겠습니다.

정부에서 수질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보 설치하면? 상식적으로 물을 가뭄 놓으면 물은 썩습니다. 그리고 수질에 중요한 것은 양이 문제가 아니라 유속이 문제예요. 흐름이 문제입니다. 총리께서 이 사실 직시하셔야 돼요.

멀쩡한 강에다가 보를 16개 설치해 놓으면 그 물이 저수지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은 썩게 됩니다, 오염물은 침하되게 되고. 그런데 어떻게 수질을 개선한다는 얘기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중에 상당수는 가동보이기 때문에 물이 많으면 내리고, 아니, 밑에 물이 없으면 흘러고……

○**조정식 의원** 총리, 그 얘기도 거짓말입니다, 그 얘기도. 우리나라 낙동강에 보가 30km마다 설치가 됩니다. 우리나라 하천은 사행천이에요. 실제로 보를 설치하게 되면 유속기간이 10배 이상

느려지게 됩니다.

(총리에게 자료 전달하는 이 있음)

들어가세요, 뭐 하십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써준 답변자료 읽지 마세요! 소신을 가지고 얘기하셔야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 제가 수질개선……

○**조정식 의원** 총리되기 전에는 대운하 반대하셨잖아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대운하 반대했습니다.

○**조정식 의원** 환경 문제와 수질 문제 있다고 하셨잖아요?

○**국무총리 정운찬** 아닙니다. 저는 대운하에 대해서는……

○**조정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대운하가 환경과 수질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반대하셨잖아요?

○**국무총리 정운찬** 안 그랬습니다.

○**조정식 의원** 그렇게 답변하신 발언록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대운하는 이 작은 땅에……

○**조정식 의원** 좋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또 3면이 바다로 둘러진 땅에 물류를 위해서 대운하를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조정식 의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총리께서 직접 발언록을, 제가 다 확인한 게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 드리기……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

지금 보면 정부에서 턴키 입찰하면서 보에 대한 설계를 다 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모의실험을 하게 돼 있어요. 모의실험 결과를 각 건설업체들이 정부에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보 설치 이후에 수질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낙동강의 구미, 상주, 의성에 설치되는 낙단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낙단보를 갖다가 그 이후에 수질예측 결과를 보니까 BOD도 좋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부영양화 일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수질 문제, 녹조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기존에는 제로 상태에서 자그마치 35일간 발생하게 됩니다.

녹조라는 게 뭔지 아세요, 총리?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압니다.

○**조정식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 보세요.

녹조는 말 그대로 강물이 녹색으로 변하는 거지요? 저렇게 되면 산소가 없어지고 물고기가 배를 허영게 드러내고 다 죽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 좋아하지요? 얘기 많이 하지요? 녹색성장한다면 4대강 강물 다 녹색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게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녹색성장, 녹색기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의가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 의원 총리께서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제발 근본적으로 되짚어 보세요. 자꾸 장관께 답변…… 자꾸 곤란하면 피하지 마시고, 4대강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 잘못하게 되면 우리 후대가 선대들을 계속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는 오염 덩어리와 고철 덩어리로 변해 버린 보를 저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다시 철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은 세종시나 이런 법과 다릅니다. 한번 손대면 다시 복원이 안 됩니다. 그것 어떻게 역사 앞에 책임지시려고 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생각하기로는 생태계가 바뀌고 새로운 생태계가 나오게 되면 자연의 섭리상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의원 4대강 문제 몇 날 며칠 밤을 새워서 물어도 모자랄 텐데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더 공부하겠습니다.

○조정식 의원 일단 4대강 문제는 이렇고, 나머지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기업 민영화 문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총리되기 전에 ‘한국경제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책을 쓰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과거에 썼던 칼럼을 모은 책입니다.

○조정식 의원 제가 그 책을 봤습니다.

거기 보면 민영화에 대해서 민영화 문제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그리고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맞습니다.

○조정식 의원 민영화는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맞습니다.

○조정식 의원 특히 국가의 기간산업과 국가의 공공서비스 관계는 대단히 신중해야 하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습니다.

○조정식 의원 자, 인천국제공항과 대한주택보증 이 두 가지가 내년엔 민영화하겠다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대한주택보증은 서민 주거복지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기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덕입니다. 지금 주택시장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총리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 문제는 그렇게 밀어붙여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총리가 소신을 갖고 이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은 이제는 좀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단지 인천공항이 우수한 것은 서비스가 좋은 것이지 허브화를 한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 외국의 노하우를 배워서 고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부 팔 것이 아니라 51%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만 민영화하면서……

○조정식 의원 그것은 기존의 정부의 답변인데요, 대한주택보증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거기는 깊이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조정식 의원 신중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 의원 재검토하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도 좋습니까?

○조정식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문희상 조정식 의원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의원 나오실 차례인데 지금 방청석에 김성희 의원 소개로 경기 화성 갑 지역구

민 마흔다섯 분이 와 계십니다.

김성희 의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會 議員**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사회를 보고 계시는 문희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화성 갑 출신 한나라당 김성희 의원입니다.

예로부터 물을 잘 다스려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는 능치수자 치천하(能治水者 治天下)라는 말이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와 가뭄 그리고 수질 오염 등 기후변화로 인해서 심화되고 있는 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21세기형 한국형 뉴딜정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착공되었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렇습니다.

○**金成會 議員** 본 의원은 역사적인 국토의 재창조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과거 국민의 정부나 참여 정부 시절에도 4대강 살리기와 유사한 사업이 세 차례나 계획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장관님, 이러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알고 있습니다.

○**金成會 議員** 어떤 내용인지 추진 배경과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99년에 경기·강원 지역에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연 한 24조 규모의 수해방지종합대책도 마련한 적이 있고요. 2002년에는 소위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때 총 43조 규모의 수해방지대책도 마련한 적이 있었고요.

○**金成會 議員** 43조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2007년에는 여러 가지, 태풍 에위니아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87조 규모의 대규모 방재계획을 마련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金成會 議員**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계획된 2건은 수해방지대책과 신국가 방재시스템 구축 방안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아요.

이는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보다 총사업비가 2배에서 4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2배 이상 길입니다.

장관님,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계획한 수해방지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과거 정부가 마련한 계획상의 총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배에서 4배 이상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세히 말씀을 해 주세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우선 차이라면 지난 정부에서 했던 사업 또는 모든 하천을 포함해서 총 전부 종합, 총망라한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차이고요. 뭐 여러 가지, 그것도 언젠가는 해야 될 겁니다마는 이 정부에서 하는 차이점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우선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4대강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다는 데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金成會 議員** 그러면 그때 당시 예산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개략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사실은 지금 뭐…… 그때 당시에 계획은 전부 세워 났습니다마는 역시 예산이 뒤따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계획 대비 실적이 극히 저조합니다.

○**金成會 議員** 그래서 약 4조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렇습니다.

○**金成會 議員** 99년부터 시작된 수해방지사업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면서도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유가 뭐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결정적으로 치수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획은 세워 났는데 여러 가지 후속 투자들이 제대로 따라 주지 못했기 때문에……

○**金成會 議員** 예산이 그렇다는 거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습니다.

○**金成會 議員** 이처럼 역대 정부에서는 수해방지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홍수 피해액은 연평균 2조 7000억 원입니다. 반면 홍수예방 투자비는 1조 1000억 원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수해복구사업비가 연평균 4조 20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예방 투자비가 수해 피해액과 복구비의 7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사후약방문 결과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해서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렇습니다.

○金成會 議員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늦은 감은 있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오늘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이제 후진국형 물 관리 정책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선진국형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해방지는 물론이고 치수와 용수, 이수, 관점에서 물을 확보하고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4대강을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 전적으로 동의하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金成會 議員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는 연평균 7.1%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하여 향후 5년간 9.9%의 국방비를 증액하는 등 2020년까지 621조 원의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국방개혁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고 있습니다.

○金成會 議員 이처럼 노무현 정부는 우리 경제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가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2010년—내년 이지요—말까지 계산을 하더라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7조 5000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금년에 국방개혁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고 있습니다.

○金成會 議員 이 수정안을 보면 연평균 7.6%의 국방예산 증가를 전제로 해서, 7.6%를 전제로 했습니다. 2020년까지 599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차질이 생겼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29조 6000억입니다. 그러나 수정된 개혁안의 예산은 30조 6000억 원입니다. 수정된 안이 첫해부터 1조 원의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중장기 계획이고 내년도 예산은 경제 사정에 따라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 간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金成會 議員 예, 좋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차액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기재부의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을 4.2%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마련한 수정안의 7.6%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총리?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金成會 議員 그래서 본 의원이 두 계획의 차액을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2020년까지 두 계획의 차이는 무려 91조 7000억 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방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가정이 잘못된 국방개혁을 좀더 유연하게, 기간을 연장해서 최초의 계획대로 621조 이상이 투입되더라도 반드시 수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군도 최초의 계획대로 전력증강을 할 수 있고 큰 불만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중기계획은 역시 그 말대로 일정 기간마다 바꾸는 것입니다.

○金成會 議員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방개혁과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는 전작권 전환 시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2006년에 최초로 전작권 전환 계획을 미국과 합의할 당시에, 지난 정부는 2012년까지 215조 9000억 원을 투입해서 공중 조기경보기와 같은 주요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2012년까지 실제로 투입될 국방비는 21조 원이 부족하며 전작권 전

환과 관련된 주요 장비 도입계획은 대부분 2012년 이후로 다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런데 장비 도입을 연기했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실은 아니고 사실은 국방개혁과 관련해서 우선순위가 낮은 일부 전력의 도입 시기를 연기했다는 것으로 국민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金成會 議員 물론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장비 대부분이 많이 연기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金成會 議員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국방 전문가들과 언론에서는 ‘2012년에 전작권이 전환되어도 한국군의 독자적인 대북 억지력 확보는 불가능하다’라면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 보도를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언론 보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金成會 議員 그리고 지난 10월 30일에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도 ‘전작권이 전환된 뒤에도 북한의 WMD 제거와 미 해병대 상륙작전은 미군이 주도적으로 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작권 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미국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고 현재와 같이 연합사가 존재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미국은 자동적으로 항공기 2500대와 5개의 항모전단, 그리고 69만 명의 미군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成會 議員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그것의 경제적 가치는 2006년도에는 1300조라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게 수천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이 군사력을 자동적으로 투입하는 곳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成會 議員 우리는 이러한 경제적·안보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金成會 議員 그러나 전작권은 언젠가 우리가 환수해야 할 국가의 중대 사안입니다.

본 의원은 국방개혁 계획이나 전작권 전환 계획은 2020년이나 2012년에 얼마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상황과 안보상황을 고려해서 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적어도 미국 측에서는 예정대로 전작권을 이양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의 국력이 신장되어 있고 또 군사력도 강하기 때문에 전작권을 이양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언급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金成會 議員 물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는 존중하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다시 협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金成會 議員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金成會 議員 제가 총리께 계속 질문을 두 가지를 앞으로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하겠습니까.

다음은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USKR인데요. 이것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부지 내에 약 131만 평의 규모로 세계적인 수준의 종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리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냥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金成會 議員 USKR은 2010년에,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3년에 개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장을 하게 되면 약 5만여 명의 새로운 고용이 창출이 되고 또 국가 이미지가 많이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관광 수입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USKR 건설과 관련하여 작년 3월에 대통령께서 주재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회의와 또 작년 4월에 실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회의에서 국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혹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작년 3월에, 다시 말해서 2008년 3월에 관광산업 경쟁력강화 대책회의에서 USKR과 관련해서 교통인프라 건설기간 단축방

안을 관계기관에서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이 보고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라는 여기서 다 말씀드릴 겨를은 없습니다.

○**金成會 議員** 그래서 국내외 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가적인 지원 의지를 믿고 약 400억 원을 초기 자금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약 3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2013년까지 테마파크를 조성할 요량으로 약 3조 원 정도 투자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成會 議員** 또한 정부는 금년 9월 16일에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그리고 국토해양부 등 14개 부처가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내수기반 확충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외국의 투자기업에게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를 해 줄 때 누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냐에 따라서 조건을 좀 다르게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규모 외국 자본의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토지를 수의계약할 때 어떤 형태든 간에 외국기업은 임대기간을 현행 5~20년에서 50년까지 기간을 연장을 해 주고요. 그리고 토지임대료도 토지가의 4~5%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1% 정도로 낮추어 주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내년 6월에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고 있습니다.

○**金成會 議員** 그러나 최근 국토해양부가 수자원공사가 반대를 하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마 이것들이 경영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成會 議員** 그래서 14개 부처가 합의를 한 내용인데 일부 기관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추진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아마도 토지를 너무 싼값으로 공급하는 데 대한 불만이라 그럴까 우려가……

○**金成會 議員** 나름대로 어떤 방안을, 그래야 외국 기업이 투자를 하나까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습니다. 외국 기관이 들

어오게 하려면 상당한 인센티브를 줘야지 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成會 議員** 그래서 현재 USKR 이 사업은 구체적인 토지 협상조차도 지금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이유를 좀 알아봤습니다.

토지 공급자인 수자원공사는 USKR 측에 사업계획의 확정을 먼저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나 투자자인 USKR 측은 토지가격이 정해져야 투자 이익이 얼마 남는지 또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할 수도 있고 또 국내외 투자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구성을 하셔서…… 이게 국책사업이지 않습니까, 3조 원이나 들어가는?

○**국무총리 정운찬** 예.

○**金成會 議員** 국책사업인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 권고를 받아들이겠습니다.

○**金成會 議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6일에 북한이 황강댐을 무단으로 방류해서 우리 국민이 6명이나 사망하는 임진강 수난사고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金成會 議員** 북한은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 댐을 무단으로 이렇게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파주시와 연천군은 2008년 5월과 7월에 북한이 황강댐을 무단으로 방류할 때 엄청난 홍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면서 국무총리와 국토해양부장관 그리고 통일부장관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건의한 적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고 있습니다.

○**金成會 議員** 그리고 또 금년도에 파주시는 다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7월 달에. 이처럼 관련 시군에서는 예방 대책 수립을 황강댐 수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지금까지도 아직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이미 저쪽에서 건의하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었던 것

이고 지금 그 사건이 난 다음에 북한으로부터 사과인가요, 유감인가요? 그것을 받아내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成會 議員** 지금 조치를 취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金成會 議員** 그렇다면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임진강과 같은 남북한의 공유하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하천은 국가 차원에서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국가 간의 협력이나 협정 체결에 있어서 권한상의 한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동의합니다.

○**金成會 議員**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의 하천법을 개정해서 공유하천을 중앙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金成會 議員**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金成會 議員**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에게 가칭 남북공유하천협력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이미 제안했습니다.

○**金成會 議員** 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10월 14일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에서 공유하천 수해방지대책, 공동이용 방안 등에 대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공유하천협력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金成會 議員** 아주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고맙습니다.

○**金成會 議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 경제와 삶의 선진화 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념의 시대에서 실용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던 것도 해묵은

이념의 논쟁이 아니라 삶의 선진화를 만들어 줄 창조적 실용을 선택한 국민들의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가 잘못된 일이나 하지 못한 일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결정한 무리한 정책이나 계획을 그대로 덮어두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은 우리 스스로가 과감히 걷어내야 합니다.

선진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서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서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김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호 의원**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출신 임영호 의원입니다.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행복도시 취소를 위해서 대국민 사기극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헌법재판소가 수도 분할이 아니고 행정부처 이전이라고 판결을 했음에도 행복도시 건설은 수도 분할이라고 우기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복도시에 교육 과학 산업 등 자족 기능을 더해서 행정 중심 플러스 복합도시로 만들었음에도 자족 기능이 없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 행복도시의 목적임에도 행정 비효율만 주장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이 수고 많습니다.

총리께서 세종시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전혀 알맹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총리로 인해서 세종시 논란이 시작되고 나라가 들끓은 지 두 달 만에 나온 발표문이 겨우 형식적인 민관합동위원회 설치와 몇 달 더 기다려 달라는 것뿐입니다.

거의 2년 동안 우리 충청도민과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원안 추진과 이전기관 변경 고시를 줄기차게 촉구해 왔습니다. 거기 서 있던 한승수 전

임 총리는 그렇게 우리가 요구를 해도 자족 기능 타령만 한 채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충청도민을 무시한 것입니다.

총리,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다소 지루하더라도 제 말씀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

○**임영호 의원** 사과하느냐, 안 하느냐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사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영호 의원** 왜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2년 동안 자족 기능 타령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다시 또 자족 기능 보완을 한다고 하는데 어째서 사과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 백년대계에 반하기 때문에 수정할 생각이 있었다면 지난 대선과 총선 때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았어야 합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국민을 속인 겁니다.

선거 당시에는 속였더라도 대통령에 당선된 후 대선공약을 정리했을 때 적어도 국민에게 용서를 빌고 수정안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의 2년 동안 세종시 원안 추진은 변함이 없다고 국민을 속이면서 뒤로는 끊임없이 세종시 변질 공작을 기도했습니다.

총리, 이 정도라면 대통령이 정말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깊이 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나타난 자구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영호 의원** 그러나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이해하기는 대통령……

○**임영호 의원** 총선 때, 대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계속 미루다가 총리를 내세워서 또 수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끈 것에 대해서, 대선·총선 때 속인 것에 대해서.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이해하기는 현재 대통

령께서는 실령 정치적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무엇이 진정 나라와 충청 지역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에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임영호 의원** 그것은 대선 때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대선 때, 총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에 와 가지고 2년이 지났는데…… 총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양심상.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 자구……

○**임영호 의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총리, 역대 정부마다 심각한 수도권 과밀화가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인식하고 계시지요? 역대 정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전두환 5공 때부터 계속 어떻게 하면 수도권 과밀화를 규제해 가지고 균형발전을 시킬까,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역대 정부에서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왔습니다.

○**임영호 의원**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과밀화 이런 것에서 사회적 혼잡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이 수도권에 인구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얘기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서울이 1000만이고 수도권에 2000만 정도 되겠습니다.

○**임영호 의원** 전 국민의 한 50% 정도 이상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기 때문에 대기업 본사, 공공기관, 조세수입, 80~90%가 서울에 다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사회적 비용 총 52조 중 수도권이 무려 34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수도권 일극체제 방치 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행복도시를 건설하는 목적도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이것이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 제1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 4조에도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이 수도권의 이익과 결코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이것이 제대로 추진되어야만 수도권 규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수도권 규제 철폐 등 수도권 발전 정책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상호 연계 추진되어야 할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그러니까 균형발전 2개의 축 이것은 버린 자식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요,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로 치자면 토지보상비를 포함해서 상당히, 4분의 1 정도가 나갔지만 실제 공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임영호 의원 혁신도시로 옮겨갈 공공기관이 157개입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을 한 곳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유일하고 부지 매입 계약만 한 곳은 7개 기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지조성공사 공정률은 평균 10% 미만입니다. 더군다나 청사를 짓기 시작한 공공기관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 정부의 서울 중심적인 반지역 균형발전의 실체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제 말씀을 하나 교정하겠습니다.

○임영호 의원 총리께서 혁신도시를 하신다고 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임영호 의원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믿어 주십시오.

그런데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 하나 교정하겠습니다.

아까 저는 세종시 말씀하시는 걸로 착각하고 25%, 또 공사가 얼마 안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혁신도시라면 제 말씀을 취소하겠습니다.

○임영호 의원 그래서 행정부처도 안 오려고 지금 여러 가지 정부가 핑계를 대고 있는데 공기업이 지방에 가겠냐 이겁니다. 총리께서 아무리 그렇게 약속을 해도 이것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안 간다고 했습니까? 다 간다고 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저희가 지금……

○임영호 의원 행복도시도 원안대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혁신도시에 지방 이전을 추구할 것입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임영호 의원 총리께서는 자꾸 새로운 사실인 양 행복도시 얘기를 할 때 자족기능 문제를 수정 이유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은

5년 전 여야 논의 때 걸러진 겁니다. 당시 한나라당이 행정중심만 갖고는 도저히 자족도시가 안 된다, 야당이 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육, 과학, 산업 등 복합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해서 행정중심 플러스 복합도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9부2처2청은 없었던 일로 하기 위해서 원안에 있는 내용을 마치 새로운 것인 양 계속 포장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족기능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 당시 국회 행복도시 관련 대책 특위에 몸담았던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실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개발계획과 또 개발계획의 수정판도 봤습니다만 자족기능에 관해서 좋은 의도로 많이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굉장히 선언적이고 추상적이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임영호 의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총리께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성 확보방안’ 이 책자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봤습니다.

○임영호 의원 수년간 이 대한민국의 국토 계획에 관계된 전문가가 이것을 갖다가 용역해서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무슨 자족도시 다시 타령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총리, 지난 30일 세종시를 방문했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만 갔었습니다.

○임영호 의원 그때 ‘비공식적으로 몇 개 기업에서 울 의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임영호 의원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보니까 이 거론 기업들이, LG·삼성·현대자동차·SK, 다들 뭐라고 하느냐 하면 허무맹랑한 소설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자꾸 기업들과 관련해서 뭔가 진행 중인 것처럼 말하는 것, 이건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또 국민을 속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 기업들이 지금 오라 가라 하면 기업들이 오는 그런 시대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게 아니고 지금 어느 기업하고 접촉했다, 어느 기업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영호 의원** 총리, 지금 지방의 기업도시와 경제자유구역, 과거 참여정부 때 여섯 군데씩 있습니다. 전혀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퍼주기식 혜택, 적어도 그리 가면 땅 장사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기업이 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또는 세계 지원을 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 앞서도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나라의 빛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내년도 국가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뭐……

○**임영호 의원** 407조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임영호 의원** 이자비용만 20조입니다. 이 이명박 정부가 끝나는 2013년 초에는 493조입니다. 그러니까 MB 정부 5년 동안 200조가 증가합니다.

4대강 사업도 그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지만 돈이 없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8조를 갖다가 재정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총리, 국가재정 상황이 이런데 과연 기업들에게 파격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니까? 나는 그것도 허구라고 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저희가 투자유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도시 환경이나 인프라 등에 대해서는 매력을 느끼면서도 아직까지 토지가격이나 인센티브가 확정되지 않아서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기업들한테 정부가 돈을 주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하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원형지 개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형지를 분양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서 거기다가……

○**임영호 의원** 원형지는 저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원이란다가 주변지역을 갖다가 훼손해 가지고 업체한테 하는데 그건 솔직히 얘기해서 처음에 분양받을 때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평당 한 40만 원가량. 그러나 가공해서 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지금 평당 가격 227만 원인데, 지금 분양가격이, 그런데 그렇게 대폭적으로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서는, 세계 지원을 앓고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현재……

○**임영호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앞으로 얘기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정부가 세종시에 이화여대 분교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화여대는 곧바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정부가 발표한 일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임영호 의원** 했습니다. 정부가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누가 했습니까?

○**임영호 의원** 내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임영호 의원** 서울대도 세종시에, 보면 서울대 총장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 보면 서울대 전체도 아니고 단과대학 전체도 아니고 이공계의 새로운 몇 과를 합해 가지고 ‘집현 캠퍼스’라고 해 가지고 1조 원 이상 투자를 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검토의견을 얘기했어요.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신문 보도는……

○**임영호 의원** 또 어떤 것 보면 입학생에게 병역 혜택까지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봐요, 정부가 대학 측에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또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그러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면 그 대학에서 그렇게 터무니없이 얘기 하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제 말씀을 들어 보시지요. 언론의 보도는 추측 기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임영호 의원** 총리,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2~3개 단과대가 오는 정도는 벌써 이미 참여정부 이후 계속해서 제기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 있는 사항입니다.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인 양하지 말아 달라 이 뜻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어떤 한 대학은 행복청인가요 거기하고 MOU까지 맺었었는데 잘 흥미를……

○**임영호 의원** KAIST나 고려대는 했어요. 했는데, 이게 안 온다고 하니까 다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닙니다. 한 대학은 지금 아주 적극적이고 어떤 한 대학은 MOU를 맺은 다음에 세종시가 지지부진하다고 그래서 흥미를

없더니 세종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니까 다시 관심을 크게 보이고 오히려 규모를 확장해서 들어오겠다는 대학도 있습니다.

○임영호 의원 총리, 겨우 대학 2~3개 정도 유치만 교육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 미국 유학을 가셨지요? 미국 보스톤에는 대학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적어도 20~30개 정도 돼야 교육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겨우 2~3개 와가지고 정부 부처 이전하고 맞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지금 거기 세종시하고 공주하고 오송하고 대덕하고 큰 학문의 벨트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임영호 의원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총리, 지금 수정을 한다면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확정됐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지난번 담화문에서 아직 구체적인 마지막 안은 없다고 그랬습니다만 상당한 안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불쑥 세상에 내놨다가는, 불쑥 세상에 내놓을 자신이 없어서 아직 못 했습니다. 곧 내놓겠습니다.

○임영호 의원 제가 볼 때는 결국 정부가 들쭉시키고 있는 겁니다. 확정되지 않고 그러는데 누가 예를 들어서 오겠다고 의향을 표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언론지상에 나오는 얘기든 어떤 얘기든 총리가 하는 얘기든 사실과 다르다 이겁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이나 기업, 연구소를 이전하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이 또 좋아하는 용역하고 예산 책정하는 데 적어도 2, 3년 걸립니다. 제가 볼 때 이명박 정부에서는 시작도 못 합니다. 삽질도 못 합니다.

차라리 총리, 세종시 건설을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이 온다고 해도 도저히 삽질 못 합니다, 3년 내에.

○국무총리 정운찬 그건 안 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거의 모든 계획사업을 시공하고 또 어떤 것들은 완공까지 시킬 생각으로 있습니다.

○임영호 의원 총리는 일자리용으로 구획된 자족기능 용지 6~7%를 마치 자족기능이 6~7%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요. 자족기능 용지와 자족기능은 서로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사실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용섭 의원이 말씀했지만 복지, 교육, 체육, 문화 전부 다 합하면 11%됩니다. 다른 어떤 신도시보다 적지 않습니다. 또 예정 지역 공간이 부족하다면, 그 주변 지역이 수도권 의 신도시하고 다릅니다. 6800만 평이나 되는 주변 지역을 이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이명수 의원이 어제 말씀한 것 중에서 총리께서는 도시계획상 토지용도 지역 변경 이런 것은 법 개정으로만 되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우리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겁니다.

○임영호 의원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토지용도 지역을 변경할 때 법을 개정해야 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거기 자족기능 지역을 얼마로 하나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법의 변화가 있어야지 됩니다.

○임영호 의원 제가 볼 때는 총리께서 잘못 아시는 겁니다. 부하 직원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토지용도계획은 그냥 도시계획상 변경하면 되는 겁니다.

또 자족기능 자꾸 얘기하는데 자족기능이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초기 활력단계, 자족적 성숙단계, 완성단계 해 가지고 2015년 15만 명, 2020년 30만 명, 2030년 50만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도시 건설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5년 이상 계속 논의해서 된 겁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50만 명……

○임영호 의원 그리고 2030년 되면 50만 명이 되는 겁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50만 명의 도시를 만들자면 가장이 20만 명 정도는 돼야 합니다.

○임영호 의원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총리께서는 수정에 목표를 두고 자꾸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연기군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나중에 세종시가 되면 뭐 5만……

○임영호 의원 아니요, 지금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은 그보다, 제가 그 숫자는 잊어버렸습니다.

○**임영호 의원** 모르겠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임영호 의원** 8만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시가 바로 입주하면 10만은 되는 겁니다. 그게 2015년까지는 15만 명이 목표입니다. 때문에 총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참 다릅니다.

대전정부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서울서 주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전에 거의 다 이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이주하지 않은 사람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임영호 의원** 아닙니다. 10년 됐어요. 1998년에 정부대전청사, 3청사 됐는데 우리가 572명을 조사했어요. 단 5명만, 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주민등록상으로는 90%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호 의원** 그러나 우리 조사 틀림없습니다. 그럼 내기를 합시다. 틀림없습니다.

자꾸 행복도시가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논리 퍼니까 그렇게 제 얘기를 믿지 않습니다. 이걸 자료에 있는 겁니다, 이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유령도시라는 단어는 썼으면 취소하겠습니다. 도시 공동화를 제가 걱정했었던 것입니다.

○**임영호 의원** 지나치게 그렇게 목표에 두니까 그런 지나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것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임영호 의원** 총리께서 행정의 비효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과 행복도시는 120 km입니다. 1시간 반 정도예요. 그런데 과천청사 비교해도 30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또 지금과 같은 비효율성, 정보통신과 교통시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지방에 있는 경상도·전라도 사람들은 세종시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더 절약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모든 것이 너무나 서울 중심적입니다.

또 행정의 비효율이 있다손 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가치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그러한 비효율 이것을 갖다가……

그래서 세종시 원안 추진이 해당지역 발전, 국가의 발전을 위한 최선의 길임을 현 정부는 알아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흠집 내서 정부 부처 이전하지 않겠다는 꿈수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수도 이전으로 세종시를 다시 이전해야 한다는 총리 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억지 논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수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입니다. 또 수도를 결정할 때에는 북한 주민 의견, 권력구조, 정부조직, 다양하게 고려합니다, 그 당시에. 때문에 통일이 되면 어차피 북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다극도시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외국도 그렇고요.

이제 마지막 정리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총리께서 1월까지 세종시 대안을 자신 있게 내놓겠다고 하셨는데 만약 수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훌륭한 대안을 내놓으려고 생각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국회에서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임영호 의원** 저는 수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 혼란의 중심에 있는 총리께서는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은 친자식으로 여기는 반면에 세종시는 서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면 건설을 취소할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충청 출신 총리에게 총대를 메게 해 가지고 세종시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참 심한 얘기지만 총리는 원 포인트 총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쏘시개 총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임영호 의원** 고향에서 하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고향에서 뭐라고 합니까? 입신양명을 위해서 고향을 팔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저는 일생을 그렇게 안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제가 사퇴 하고 안 하고는 좋은데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세종시 사업을 안 하려고 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좀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호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무총리 정운찬** 나가도 좋습니까?

○**임영호 의원**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신물 나게 봤던 ‘행정 독재’의 망령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정권 목적이나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기존 법률이나 국회는 언제든 무시하겠다는 반민주적이고 초법적인 발상입니다.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라고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종시,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떤 대안도 9부2처2청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임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태원 의원 소개로 경기 고양시 덕양 을 지역구민 예순아홉 분이 와 계십니다.

다음은 김태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의원** 고양시 덕양 을 출신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고맙습니다.

○**김태원 의원**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총리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출직 공직자가 최우선시하는 용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싫어하는 용어요?

○**김태원 의원** 대개 선출직 공직자가 최우선시 하는 용어가 ‘초심을 잃지 않겠다’……

○**국무총리 정운찬** 아, 예.

○**김태원 의원** 많이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태원 의원** 그 의미는 총리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태원 의원** 이 ‘신뢰’ ‘믿음’ 한 번 잃으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총리께서 현 정부가 국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받는 그런 성공적인 정부로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태원 의원**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 회복이 선진 유럽에서조차도 칭송을 아주 많이 받아 왔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습니다.

○**김태원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그와 아울러서 아직도 우리가 미진한 부분 또 정부에서 신경을 더 써야 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각종 지표로 보면 계층 간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총리께서도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 의원** 저소득층과 중간층의 가처분소득은 줄고 있고 고소득층은 지금 현재 늘고 있습니다.

지니계수도 도시가구 기준으로 2008년 현재 0.321로 2003년 이후에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 의원** 그래서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 비율이 지난해에는 14.3%로 2000년 10.5%에 비해 3.8%나 또 높아졌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있는 사람들은 더 버는 반면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것이고 계층 간 소득 격차는 더 심화될 것 같은데 총리께서도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의원** 정부가 서민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내놓고 소비자심리지수나 경기전망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산층 서민층의 고통이 덜어지지 않는 한 우리 사회 통합은 먼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동의합니다.

○김태원 의원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민생 대책은 고용과 소득 안정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어나는 우리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이나 공공기업이 투자를 해서 사람을 더 고용하도록 유도도 하지만 직접 희망근로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려고,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동시에 경쟁 과정에서 뒤쳐진 사람들에 대해서 소득부족분을 메워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경제는 지금 지니계수가 소득으로 보면 0.3 넘어 있지만 부로 보면 0.6이 넘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해 줘야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면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원 의원 우리 서민들은 총리께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국무총리 정운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원 의원 그런데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오히려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태원 의원 또 청년실업률도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총리께서는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 정운찬 세계화 과정에서 거기 잘 적응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 나가지만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른바 세계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청년실업으로 본다면 특히 대학졸업자들은 굉장히 많아서 높은, 좋은 자리를 바라는데 현재 기업들은 대학생들의 눈에 맞춘 일자리는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큰 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원 의원 그런데 고용이 창출되려면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습니다.

○김태원 의원 그런데 현재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GDP 대비 설비투자액 비율이 8.8%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지난 1970년 이후로 가장 낮습니다.

정부는 그동안에 투자를 많이 독려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총리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원 의원 예, 말씀하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일반적으로 투자가 안 되는 이유는 규제가 너무 많다, 경제정책이 일관성이 없다 또 기업의 투자 마인드가 적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건 일리 있는 말씀들입니다. 규제도 좀 줄여 주고 경제정책도 좀더 일관성을 기하고 또 이른바 기업가 마인드 또는 야성적 충동이라고 하는 것을 키워 주면 좋은데, 실제로 한국 경제는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지 않습니까?

○김태원 의원 예,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6개, 7개 산업 분야에서 세계 선두 그룹에 끼고 있고 또 2만 달러에 4900만 인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잘되고 보니 이제는 투자를 하려면 과거처럼 외국 기술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의 첨단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연구와 개발에 돈은 많이 썼지만 그 연구와 개발들이 대개 응용적인 것이고 또 단기적인 것이었는데 비해서 이제는 좀더 기초적이고 장기적인 것에 관심을 뒤야 할 뿐만 아니라, 역시 투자 대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집행할 고급 인력이 좀 부족한데 교육을 좀더 개선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에서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희망프로그램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지만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연구와 개발 그리고 교육에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원 의원 총리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태원 의원 빈곤 해소와 관련해서 제가 정부

에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빈곤율은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성과지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의원 그런데 정부는 일자리를 몇 개 늘리겠다는 발표는 자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책 빈곤율을 얼마 낮추겠다는 정책목표는 제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맞습니다.

○김태원 의원 그래서……

○국무총리 정운찬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어떤 수치를, 목표치를 정해 놓고 그거를 달성하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아예 수치는 제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태원 의원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는 1999년 유럽에서 가장 높은 아동 빈곤율을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후에 야심적인 아동복지정책을 통해서 큰 성공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도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내놓고 노력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외국의 사례를 배워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원 의원 다음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같은 규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장관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총리께서는 우리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는 점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 의원 그러나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되었던더라도 층고, 용적률, 개발밀도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고통이 여전한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그냥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원 의원 그것은 나중에 국토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비행안전구역과 같은 국방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상 이유라는 명분만 다를 뿐 이들 군사시설 관련 규

제 역시 개발제한구역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희 지역 예로 보면 40년 가까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개발 행위를 지금 현재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성장과 또 하나는 국민통합이라는 이 두 가지 축이 작동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도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동의합니다.

○김태원 의원 우리는 그동안에 경제발전기와 민주화 시기를 거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늘려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배려는 그동안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리?

○국무총리 정운찬 예, 동의합니다.

○김태원 의원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역시 사회통합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원 의원 따라서 저는 먼저 잔존 규제나 중복 규제에 대해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완화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 합리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길을 터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40여 년 희생과 고통을 당해 온 규제 지역주민들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원 의원 그러나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거 여건이 개선되기까지는 재정적, 시간적인 그런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해당지역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진지하게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원 의원 총리께서는 규제개혁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러한 개발

제한구역 해제지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주실 의향 가지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원 의원 어쨌든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고맙습니다.

○김태원 의원 다음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에 감세와 지방세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지요? 장관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김태원 의원 그 내용에 보면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재정 세입 30조 1741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지방소비세가 도입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재정 세입 순증은 4조 4355억 원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재정은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더라도 2012년까지 25조 7387억 원의 순감소를 보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재부 생각하고 좀 다르지요? 장관님,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수처에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감세로 인해서……

○김태원 의원 그렇지요? 재정의 어려움은 동의하시지요, 대개?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방세입에 감소가 일어난다는 부분에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하나 유의해야 할 것은 감세로 인해서 지방세입은 감소하고 중앙재정은 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주는 것이거든요.

○김태원 의원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래서 중앙재정도 같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원 의원 그래서 세입 감소로 중앙정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재정력이 약하고 중앙 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그 충격이 매우 클 것이라는 사실은 장관께서도 동의하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김태원 의원 그래서 지방의 세입 감소에 대한 어떤 보전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체 세입 중에서 지금 지방정부가 65%를 쓰고 있고요 중앙정부가 35%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채무는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채무보다도 훨씬 많습니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중앙정부가 가능하면 어려운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데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당장에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주는 조치가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분에 대한 이자 지원을 내년에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또 중앙정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재정 지출을 구조조정 한다든지 예산 낭비를 줄인다든지 자체 세입 확보 노력을 한다든지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의원 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다같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김태원 의원 그러나 하여튼 우리 지자체들이 느끼는 고통은 생각보다 이것이 크다 그런 것을 지난 국정감사 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께서 이러한 부분은 전향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유의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의원 다음으로 최근 몇 년간 가장 논란이 많았던 주제가 지방 이양 사회복지사업의 환원 문제 이 부분 우리 장관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김태원 의원 지금 현재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지방의 복지 수요가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지방의 재정력은 지금 현재 그 수요를 따라잡기 대단히 부족한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우리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분권교부세를 5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김태원 의원 이 부분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본 의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원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우리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런데 의원님,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방재정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이러한 국고보조사업을 환원하는 것이 우선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겠습니다마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당초에 이러한 사회복지 분야를 포함해서 일부 지방사업으로 이양할 때는 지방분권체제의 균형을 맞춘다든지 또 재정 분권의 실현 등 우리가 앞으로 장래에 미래 지향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재정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만약에 이것을 다시 중앙에 환원을 시킨다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역행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 전문가라든지 또 관계부처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분권교부세 운용기간을 5년간 한시적으로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보완조치를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양사업을 국고로 다시 재환원하는 문제는 현 시점에서는 좀더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원 의원 사회복지에 국가는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 책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이라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김태원 의원 그래서 서울 어느 구에서는 855억 원을 들여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한다고 합니다. 재정이 탄탄하면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김태원 의원 그러나 복지는 최소한의 균일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그러한 어려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균일성

조차 보장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 이양 사회복지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알겠습니다.

○김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총리께 질문을 드렸습시다마는 그동안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서 많은 규제 개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김태원 의원 우선 경기도의 경우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주거 정비 시 평균 층고 3층 이하, 용적률 12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장관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 의원 지방위임사무라고는 합시다마는 시군은 용적률을 높이고 싶어도 시도 눈치를 보고 또 시도는 중앙정부, 국토부의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게 우리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300호, 1000인 이상 대규모 집단취락만 중밀도 이상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좀 완화하셨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의원 그러나 문제는 이 경우도 사업성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자체 개발한다든지 또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우리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 의원 잘 개발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김태원 의원 그래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집단취락의 정비를 위한 건폐율·용적률 등의 완화에 대한 본 의원의 자료 요구에 개발 압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해제지역을 저층·저밀도 개발함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결국에 국토해양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 저층·저밀도 개발이라는 대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한 실질적인 주거환경 정비가 좀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그러면 무엇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했느냐’ 그런 물음에 장관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 관련 주민들의 고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원래 그린벨트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취락지구 같은 데는 사실은 그런 계획이 없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해제를 해 드렸는데 막상 또 해제를 해 놓고 보니까 주변지역에 대한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이게 현지 실정을 좀 반영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미 법령이나 이런 것도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반시설 설치 현황이라든가 인근지역의 개발 정도 등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원 의원** 장관께서 이에 대해서 아주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식경제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김태원 의원** 제 지역 현안 사업이라 좀 질문하기는 뭐 합니다만 워낙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포구에 위치한 당인리 화력발전소, 마포 여의도 용산 반포 등에 전력과 열을 공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의원** 그런데 이 발전소의 가동연한 만

기가 지금 현재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김태원 의원** 그래서 이제 발전소를 신축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현 위치가 아니라 경기도 고양시로 이전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관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그런 협의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 의원** 그런데 현재 이전지로 검토되고 있는 고양시, 어떤 현실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잘 모르시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 의원** 서울시의 분뇨, 하수, 쓰레기처리 시설, 화장장 이게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기피시설 집합소입니다.

이 기피시설로 인해서 고양지역 주민들, 특별한 보상도 없이 그동안 많은 고통과 피해를 당해 왔습니다.

장관께서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인리발전소는 아시다시피 수명이 거의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발전용량 전기 때문이면 폐쇄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당인리 발전소는 지금 서울시의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 내에 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열 공급 대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공약으로도 문화창작발전소로 이전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인근에 있는 고양시하고 이전 문제 협의를 즉 진행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서울시의 여러 가지, 화장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거기로 가서 고양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는 사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뿐 아니라 고양시도 열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고양시 등에서 잘 협의를 해서 고양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또 고양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원 의원** 당초 한전에서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지하에 새로 지으려고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훨씬 적게 들고 효율성도 높고 하등 문제가 없는데 공급권역도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 추진한다는 것은 전혀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김태원 의원**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지고, 하여튼 고양시 이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서울시 고양시 등 관계 기관의 원만한 협의가 전제가 돼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원 의원** 그것에 대한 고양시민들의 납득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위원장께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서면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준금리가 인하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가 계속 높아지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 대한 대책,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됨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금리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 규모 축소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커지는 문제 등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김태원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서민의 눈으로 생활 주변의 경제 문제를 들여다보려고 애썼습니다.

금융위기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저는 이 어려움, 반드시 이겨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우리 사회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시장에 가면, 택시를 타 보면, 노인정이나 보육 시설에 가 보면 확연히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는 수많은 지표도 그 앞에서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재정정책, 조세정책이 무엇인지 정부와 국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김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문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의원**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입니다.

정치에서 신뢰란 중요합니다. 허나 정말 중요한 것은 신뢰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은 민정 불참이라는 형식보다 조국 근대화라는 역사와의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정치적 이해 득실보다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약속이 중요하지만 잘못된 것이나 이후의 상황이 달라져서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대운하 건설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국민의 반대로 포기를 하였습니다. 공약을 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때 기본 구성된 새만금 사업의 경우에 농지비율 72%의 원안이 현 정부 들어서 산업, 관광 등 비농지 70%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만금 사업의 원안수정은 왜 문제 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행복도시 세종시 건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정 논의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국가 균형발전과 충청 발전이라는 궁극적 목적에서 어긋난 점이 있습니까? 새만금 사업의 내용 변경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세종시 문제를 정치적·정략적 계산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깊이 있는 성찰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상 부의장, 이윤성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내외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보임에 따라서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의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는 데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현재와 같은 회복세가 향후에도 지속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기재부장관께 물겠습니다.

지난달 13일 전경련 경제정책회의에서 강만수 전 장관께서 더블 딥(double dip) 언급하셨습니다.

장관께서는 앞으로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저희는 이번 G20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내년 이후에 세계 경제를 완만하지만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많은 견해인 것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정부도 그런 쪽에 지금 중심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환 의원 예.

3/4분기 우리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2.9% 였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조문환 의원 2.9%라면 2002년도 1/4분기의 3.8% 이후에 7년 6개월 만에 가장 빠른 성장 회복세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습니다.

○조문환 의원 이런 현재와 같은 성장 회복세가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고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성장세는 지속된다 하더라도 그 속도나 폭은 금년 2/4분기에도 2.6% 성장을 했고요, 전기 대비입니다마는, 3분기에 2.9% 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라고 그래서 모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성장률은 그것보다는 분명히 낮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완만하나마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폭은 상당 폭 축소될 것으로 봅니다.

○조문환 의원 주요 선진국의 경기선행지수하고 경제성장률도 호전되는 모습인데 선진국들의 잠재 불안 요인은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출구전략과 관련해서 선진국 경제전망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해외 시장에서의 더블 딥 가능성을 거론하는 폴 크루

그먼 교수나 스티글리츠 교수 또 몇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라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경기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유럽 경기가 상당히 느린 쪽으로 회복이 되고 있어서 걱정들 합니다마는 이번에 보면 내년에는 유럽 경기도 많이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요. 중국은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일본도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문환 의원 예.

자,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0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17에서 전월보다 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그다음 2개월째 연속 감소했던 소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9월 소비재 판매가 전월 대비 1.8% 상승을 했어요.

아마 신차 효과와 백화점 매출 호조가 주 요인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민간 주도의 경기 활성화의 첫 신호탄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아직은 조심스러운 자세로 관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시적인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저 상황을 가지고 민간 부분의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고 있다고 본격적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경계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문환 의원 예.

자, 계속 보시지요.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18.8% 증가하고 두 달이나 감소했던 건설기성액과 건설수주도 각각 8.4%, 58.4% 증가를 했어요. 하지만 주요 항목별 분기별 성장 추이를 보면 3/4분기에 고용과 소득 부진으로 민간 소비가 둔화되었어요. 상반기에 재정이 집중된 탓에 정부 소비도 감소를 했어요.

총투자는 급속히 증가를 했지만 설비와 건설투자가 둔화되고 있고 결국 재고투자만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다음 GDP 성장 기여도를 보면 재고투자의 기여도가 2.9%로 이게 전부입니다. 이래서 향후 성장세가 지속되겠느냐, 장관님, 재고 싸이클 호전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재고조정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아직은 기업의 투자나 소비가 본격화가 되고 있다고 보지를 않

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특히 걱정되는 것은 고용 사정입니다. 고용 부분은 눈에 떨 정도의 진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도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이 고용 부분입니다.

고용은 기본적으로 경기 회복에 후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데다가 지금 일자리 창출이 결국은 민간 부분에서 투자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는데 아직 민간 부분에서 그런 본격적인 투자나 소비가 회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확장적인 재정·금융정책을 통해서 나름대로 민간의 성장동력을 보완해 왔습니다마는, 대체해 왔다는 것이 더 옳은 얘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리해서는 되지 않을 시점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문환 의원 결국은 국내 경기 회복의 내용이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내년 하반기 침체가 예상된다는 견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제가 언제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근거 없는 낙관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도 이상의 비관이나 그런 사항도 똑같이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균형된 시각으로 정부는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환 의원 다음은 출구전략 부분인데요, 장관께서 제일 처음 출구전략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신 것은 아마 경기회복기라는 사인을 준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여기고 있고요, 그다음 이후에 출구전략을 안 하겠다라는 발언은 새싹은 안 꺾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시기적절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장관의 출구전략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저희가 출구전략을 논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은 너무 빨리 하게 되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우를 범하게 되고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1930년대 대공황 시절의 미국, 지난 1990년대 장기불황 때 일본에서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출구전략을 너무 늦게 시작하게 되면 소위 인플레이라든지 자산 버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구전략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라고 하겠습니다, 언제 출구전략을 시행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의할 것이 스피드입니다, 어느 속도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스케일, 어느 규모로 할 것인지. 이 모든 것에 미치게끔 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소위 시퀀싱(sequencing)입니다, 어떤 순서로 어느 부분부터 할 것인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정부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환 의원 현재로 출구전략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르다, 현재 경기 부양 기조를 유지해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기다, 출구전략을 할 때 하시더라도 이 출구전략이라는 것이 원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출구전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은 총재께서 지난 달에 금리 인상 시사하는 발언들을 하셨어요. 그게 뭐 물가 상승 기대심리 해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안 그러면 금리 인상 사인 주고 인상 안 할 때 나타나는 금리 인하 효과를 고려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 자리에 안 계셔서 물어볼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해서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강만수 전 장관의 더블딥(Double Dip) 발언도 그렇고 지금처럼 중요하고 예민한 시점에 시장에 이처럼 상이한 시그널을 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분명합니다. 아직은 출구전략에 필요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준비는 하되 아직은 소위 시행할 시기는 프리머췌어(premature), 아주 시기상조다 하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일부 혼선이 있을 때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러한 신호를 분명히 보내고 있고요.

또 하나 측면은, 일부 다른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이런 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부도 실수를 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또 각 영역이라든지 생각에 따라서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의 논쟁이다, 하나의 토론이 이

루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봐 주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일사분란하게 한편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균형 감각이나 안정성 측면이나 합리성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논쟁도, 하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해 가는 데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의 논의들은 하나의 논쟁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저희는 희망합니다.

○**조문환 의원** 수도권 일부 지역 특히 강남 3구에 대한 부동산 과열 징후가 있는 데 대해서 LTV나 DTI 규제 같이 아주 미시적인 경제 조율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 나타나는 과잉 유동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전면적인 출구전략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되풀이됩니다마는 아직은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이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인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다만 자산 시장에서 우려될 수 있는 일부 버블에 관한 문제라든지 과잉 유동성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부 내에서 긴밀한 부처 간 협조를 통해서 필요할 때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 7월 달에 단행했던 LTV 적용 문제 또 지난 9월 달에 했던 DTI 적용,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간단없이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은행에서도 나름대로 금리 이외의 부분에서 또 재정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위 국제 시장에서 공조를 취해야 할 때 소위 언컨벤셔널 메저(unconventional measure)라고 그러합니다.

비전통적인 수법, 비정상적으로 취했던 일부 이러한 조치들은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에 맞추어서 컨벤셔널(conventional)한, 조치 이전의, 그런 비전통적으로 비정상 그랬던 부분은 정상화 조치로 돌리고 있다는 말씀을, 이러한 부분은 미리 예고를 하지 않고 조용히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조문환 의원** 지금 정부에서 내년 성장률 4% 예상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습니다.

○**조문환 의원** 성장률 4%에 물가상승률이 아마 3% 이상 넘어가면 한은이 금리 인상 없이 버티기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장관께서는 내년 물가상승률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물가 상승의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마는 변수는 있습니다. 유가를 비롯한 해외 원자재 가격이 세계적인 경기가 회복이 되면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 세계적인 수요도 제한적으로 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크게 우려될 수준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문환 의원** 지금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물론 재정건전성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는 스몰 오픈 이코노미(Small open economy)고,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노령사회로 가고 있고, 거기다가 남북문제까지 있어 가지고 세이프티 넷(safety net)이 완성되어져 있는 선진국하고 단순히 비교해서 올해 GDP 대비 재정수지가 우리가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요, 이게 불가피한 상황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습니다. 최근 한 2년 동안 우리의 재정 적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다른 나라들도 재정 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재정이 건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서두를 떼셨습니까마는 예를 들면 경제 성장이나 발전이 이미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 있고 또 국가 자원이 우리보다 풍부한 나라들에서 갖고 있는 재정의 건전성하고 저희 재정의 건전성을 수치로 스트레이트로 그냥 절대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스몰 오픈 이코노미(Small open economy)로서 자원도 없고 대외 의존도가 심한 나라에서 분명히 또 반드시 다른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서 재정건전

성을 더 크게 확보하고 유지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부분에서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 의원** 이게 참 전 세계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우리만의 문제인 듯이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거든요? 경기 회복이 가장 좋은 재정건전성 대책이다라는 점에서 단기 재정 적자 문제를 둘러싼 논란보다는 지금은 지속적인 경기 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 야 될 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당에서는 이번 정부 임기 말에 국가채무가 500조에 달한다. 참여 정부 말기보다 200조가 증가한다라고 액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관님, 그 사이에 우리 경제 규모도 커지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를 하나 들면 관리대상 수지 기준으로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재정 수지 적자가 GDP의 마이너스 5%입니다마는 내년에는 우리가 이것을 2.9%로 가져옵니다. 세계에서든 대단히 높다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2.1%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우리의 저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에서 걱정하시는 재정건전성 문제는 지나치게 조금 과잉된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끊임없는 설득과 노력을 통해서…… 저는 그분들의 얘기를 경제운용을 함에 있어서 정말 유의해서 적절하게 잘 하라는 격려와 충고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조문환 의원** 이번 정부 말 2013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가, 지금 기재부에서 전망하는 게 35.9%로 전망을 하더라고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 의원** 그러면 실제로 2009년보다는 조금 높아도 10년보다는 낮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절반 이하의 수준입니다, 아주 나쁜 나라하고 비교해도요.

○**조문환 의원** IMF 위기 당시 첫 2년 동안의 재정수지하고 지금 이번 위기가 왔을 때 재정수지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금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도 한 마이너스 5% 됐어요. 이번에도 한 마이너스 5%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급격히 그 숫자가 떨어지는 겁니다마는 상황

은 그때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나쁩니다.

왜냐하면 IMF 위기 때는 세계 시장은 건전했었어요. 우리가 수출 주도 시장인 선진 시장은 굉장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7년 78년 79년 이후에는 바로 우리가 수출 확대를 인해서 재정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하고 다른 것이 전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서, 그때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으로만 한정이 되었었는데 이것은 전 세계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시장이 죽어 있다는 데 대해서 그때보다 우리가 상황이 나쁩니다.

○**조문환 의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2년차 때보다는 재정수지 적자가 한 1% 2년차 때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 의원** 그러면 우리가 국제 기준이나 선진국 사례를 들어 볼 때 보증채무나 공기업 부채나 통안채를 국가부채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오늘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고 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IMF 86년 기준은 일반 정부가 직접적인,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지는 확정채무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나 하면, 직접적으로 상환 의무를 진다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일부 야당 의원께서도 질문하신 한국은행이 통화관리를 위해서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포함하고…… 일부 교수가 했는데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도 국가채무로 넣자는 말씀이거든요? 또 공기업이 갖고 있는 채무도 국가채무로 하자. 이것은 상환 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국제 기준으로 이것은 안 넣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다음에 확정채무라 하는 것은, 이것에 상환되는 것이 보증채무입니다, 보증채무. 보증채무는 우발채무입니다. 정부가 보증을 서서 원 채무자가 채무 상환을 이행 못 할 때 상환을 이행해야 되는 우발채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발채무나 정부가 아닌 귀속주체가 지는 채무는 국가채무에 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합니다. 저희는 일반 정부가 직접적으로

상황의무를 지는 확정채무입니다. 이것은 OECD 기준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IMF 기준입니다마는 OECD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 않은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문환 의원** 국가채무라는 게 대외적으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채무 규모가 제시되어야 되거든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습니다.

○**조문환 의원** 실제로 국가채무 항목에 국제적으로 포함이 안 되어서인데 이게 국가채무로 포함시키면, 이게 국가신용등급 평가 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라구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알겠습니다, 예.

○**조문환 의원** 자, 다음 중기재정총량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기재부에서 2013년까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조문환 의원** 이번 국감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이 목표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빨리 제대로 된 달성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조문환 의원** 지금 실업문제도 있고 지니계수도 상승을 하고 노령사회 진행되는데 세출을 인위적으로 3% 미만으로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구요.

그다음에 2011년부터 성장률 5%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장밋빛 전망이다라는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국회에 5개년 중기 재정건전성 계획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바탕으로 소위 세부적인 계획, 세부적인 목표치는 저희들이 계속 지금 디벨롭(develop)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우선 당장은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단계별로 그러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가 진행되는 대로 필요하면 국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환 의원** 예, 결국 한두 해 재정적자는 현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문제는 이제 적자기조가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이 재정건전성 문제라는 것은 잠재 성장률 이상의, 경기 회복이 된 후에 그때 실행을 해야 됩니다. 즉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국 대공황 때 루즈벨트의 긴축재정하고 금리 인상 그리고 하시모토 내각이 소비세 인상을 하면서 잃어버린 10년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 저희들이 유념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조문환 의원** 자, 내년에 국채 발행 규모가 얼마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30조 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환 의원** 지금 신규 발행액 이게 30조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우리 일반회계 기준으로 봐서……

○**조문환 의원** 예, 작년 추경 때 국채 발행 규모가 크다 그래서 금리 상승우려가 있어 가지고 한은에서 직매입해야 된다 그다음 회사채의 구축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많은 우려가 있었지요?

그런데 올해 지금까지 국채량, 발행된 국채량 어느 정도 되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올해에 한 80조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 기억에……

○**조문환 의원** 10월 말까지 83조 한 2000억……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문환 의원** 벌써 내년 발행량보다 넘어 갔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현재까지 진행을 보면 우선 양을 소화하는 데 별문제가 없었고요. 금리도 크게 변동한 것 없었습니다.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 지금 유동성이 이 부분을 흡수하고 국채시장을 나름대로 또 발전을 시키고 제도적으로도 저희들이 많은 개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시장을 어떻게 개발·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들과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도개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태핑(tapping)

을 해 보면 내년도 재정 운용에 있어서 발행되는 채권 소화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문환 의원** 예, 지금 국채 3년물 수익률이 한 4% 중반 정도 되는데 이게 국채 발행량 증가로 인해서 금리 상승이 우려되는 부분은 재정건전성 우려하고 마찬가지로 정책적 순위에서 경기 활성화보다는 아직은 뒤에 두어야 된다는 견해에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경기 회복을 통해서 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창출되고, 그런 걸 통해서 투자가 일어나고 소비가 일어나면서 세수가 증대되고 그런…… 다시 또 재투자가 되는 이런 선순환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고용 창출을 위해서라도 또 이러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도 내년에는, 이후에 경기 회복이 제일 급선무로 정책에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문환 의원** 세계 경기가 계속 부진으로 수출 주도 경제 회복은 당장은 힘들다, 그러면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 활력·회복이 중요한데 지금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나 BIS는 올 2월이 저점인데 기업 인식은 3/4분기를 저점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실물 경기하고 체감경기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여기 해소방안 뭐 없을까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이것은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공식적인 지표하고 체감으로 느끼는 것하고는 상당한 부분에 갭이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경기가 어려울 때 특히 경제적 취약층들이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결국은 최대의 복지, 최대의…… 경제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투자가 일어나야 하는데요. 지금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의 투자와 관련해서 활발한 논의가 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문환 의원** 내년 환율을 얼마 예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것은 답변을 보류하겠습니다.

○**조문환 의원** 하여튼 일부 민간 경제연구소에서는 대체로 원화 강세를 예상하는데 원화 강세가 되더라도 이게 나 홀로 강세가 아니어서 경쟁

력 부문에는 큰문제가 없는데 결국 채산성이 낮아지면 투자나 고용 개선이 지연될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서 좀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저희 기획재정부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환율 문제를 말씀하시면 저는 듣기만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적으로 달러가 약세 추세에 있고요, 모든 나라들이 달러에 대해서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부는 그렇다고 그래서…… 환율의 흐름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하는 이상 현상이 있거나 하면 정부로서도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종합적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조문환 의원** 장관님 들어가시고.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조문환 의원** 다음 금융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위기 시 재정 확대가 위험 흡수 기능을 가지는데 위기가 끝나고 나면 위험을 제거해 가지고 개혁의 기초가, 자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구조조정 이거든요.

그런데 구조조정이 미흡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특히 조선·해운·건설 쪽의 구조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조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가 10여 년 전에 가졌던 그런 구조조정하고는 조금 성격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구조조정이 미흡하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여건임에도 정부가 방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조선·해운·건설 이런 업종별 구조조정을 하고 그 이후에 대기업 그룹, 그다음에 개별 대기업, 그다음에 최근에는 중소기업을 3차에 걸쳐서 이렇게 구조조정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문환 의원** 일각에서는 구조조정을 좀더 강력하게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물론 지금 조선 부문에서 RG콜 부분도 있고 용대선이 있고 해외 자본 들어온 부분도 있고 이런데 결국은 좀더 기한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소위 말하는 바깥에

들어가면 지원을 안 한다든지 어떤 페널티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방법이나 지금 해운 쪽에 보면 채권단이 은행하고 보험하고 복보증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담보채권자하고 무담보채권자하고 이런 채권자 이견도 있고 이래서 지금 금융위에서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지금 현재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문제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조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도 특히 해운하고 조선업에 대해서는 이런 구조조정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또 그러한 해운업과 조선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지금 강구를 했습니다.

○**조문환 의원** 예.

지경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임시투자세액공제 부분 폐지 문제에 대해서 실물 경제를 책임지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지금 경제 상황이, 조금 전에 질문·답변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솔직히 내년 경제가 자생력 있게 회복을 하려면 민간 투자·소비가 살아나는 게 아주 최대의 관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민간 투자가 조금은 나아진다고 하나 여전히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그런 시책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꺼번에 이렇게 폐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또 세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 기획재정부위원회에서 관련 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요새 업계와 간담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구동성으로 지금은 그것을 폐지하기가 시기가 안 맞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투자가 경기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작년, 금년에 굉장히 움츠리고 있다가 경기

전망이 좀 서면 이제 투자를 한번 할 시기가 되었지 않느냐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에 찬물을 좀 끼얹는 측면이 있고 또 철강이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기가 부진하면서도 계속 투자를 해 왔던 업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그것을 기대하고 수익률을 계산하고 투자를 해 왔는데 그런 부분은 추가로 또 세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으로 봐서는 저는 한꺼번에 폐지하기보다는 좀 단계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또 세수 문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위원회에서 세법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제가 기획재정부나 다른 관계기관에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환 의원** 임투세액공제 같은 이런 목적 감세가 결국 투자와 확실히 연결된다, 그래서 고용 창출이나 민간 경제 부분의 부양 효과가 훨씬 뛰어나다는 점이 있거든요.

실제로 임투공제라는 부분이 대부분 제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니까 법인세 인하로 대체하기가 실질적인 혜택이 좀 부족하다는 말이 현장에서 안 들립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저도 그런 점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인세 같은 경우는 대체로 수도권의 대기업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설비투자 이런 것들은 지방의 공단이나 이런 것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세수를 가지고 보더라도 정책 효과는 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지금 설비투자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대규모 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지금 당진 같은, 충남 같은 제철 산업이나 POSCO 같은…… 울산, 자동차 같은 이런 쪽 또 석유화학 이런 쪽이 대부분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같은 세수라도 기업정책 효과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 의원**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기재부장관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작년 1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하고 3월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임투자세액공제율을 1%포인트 증가할 때 신규 설비 투자가 1.3조 원에서 1.7조 원으로 는다, 그게 예상된다, 그래서 일몰 주장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조문환 의원 일몰 연장 주장하셨어요.

작년 12월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하면서 일몰 1년 연장했고, 그다음에 공제율도 기존 비대상이던 수도권과밀억제구역에서 3%, 그다음 그 외 지역에서는 7%에서 10%로 확대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조문환 의원 그리고 특히 올해 5월 같은 경우에는 투자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할 경우에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6월 중순부터 갑자기 임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한다라고 거론하고 나왔어요.

항간에서는 결국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메우려고 갑자기 정책이 바뀌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갑작스런 정책 변화가 정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보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임투를 폐지하자는 것은 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 붙은 ‘임시’를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투자세액공제를 어떻게 저희들이 제도를 변화하느냐 하면……

○조문환 의원 28년이나 지속되어 왔는데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반적인 목적, 그런 투자 세액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 시설이라든지 에너지 절약,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개발, 환경보전, 이런 기능별 투자 지원 세제로 전환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타임 호라이즌(Time Horizon)이 좀 짧은 관계로 충분한 설득이 못 댔습니다마는 이 임투는 이미 이게 임투가 아니라 항시 투자세액공제가 돼 가지고 지난 28년 동안 도입해서, 20년 동안 세제 지원해 오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대기업에 대한 무슨 보조금처럼 지금 이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임투 세액의 약 85%가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고요, 그러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좀 예고를 하고 금년 연

말까지 투자를 하면 계속 임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난 6월에 미리 예고를 하려고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우리 최경환 장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고 보니까 또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는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최경환 장관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기획재정위의 여당 간사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위 위원장을 하셨겠지요. 그래서 이 점 같이 모여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문환 의원 여차피 기업의 설비투자라는 게 대부분 장기적으로 투자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한테 집중된다고 하지만 기계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후방산업의 효과가 큼니다. 그래서 그 부담들이 중소기업한테 전가될 수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계적으로 축소를 하거나 안 그러면 공제 대상을 좀 조정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기업의 충격을 좀 완화해 주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알겠습니다.

○조문환 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맞아서 우리 정부의 빠른 대응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경기 회복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됩니다.

경기 회복의 시그널이 민간 부문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려면 구조조정의 고폼를 조이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녹색성장이라는 중장기 미래 비전이 더욱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 뒷받침을 소홀히 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기업·정치권 모두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조문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

○출석 의원(257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운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진
김영환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김희철	나경원	나성린	노철래
류근찬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진	박희태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세영	우윤근	우재창	원유철
원혜영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윤영	이강래	이경재
이계진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상민
이석현	이성남	이성현	이시종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몽준	정미경	정범구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욱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승용	진성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한선교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진하			

○개회 시 재석 의원(92인)

강명순	강봉균	고홍길	김금래
김동철	김상희	김성순	김영록
김영선	김영환	김유정	김정훈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주선	백성운	백원우	변재일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송영길
송훈석	신영수	신지호	안규백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유성엽
윤상일	이강래	이경재	이계진
이명수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용희	이운성	이인기	이정현
이종구	이진복	이찬열	이춘식
이해봉	이혜훈	전여옥	전혜숙
정갑윤	정수성	정영희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조배숙	조승수	조영택	조전혁
주승용	진수희	최경환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최철국
한선교	허천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재형	홍희덕	황진하

○속개 시 재석 의원(74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권성동
김금래	김동철	김상희	김성순
김성조	김영환	김용구	김유정
김을동	김재균	김재윤	김정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혜성
김효석	나성린	박기춘	박대해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종근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종표
송영길	송훈석	신낙균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안경률	안규백
여상규	오제세	원유철	원희목
유선호	유일호	윤상일	윤석용
윤영	이명규	이범래	이애주
이영애	이용섭	이용희	이운성
이혜훈	이화수	이희창	정영희
정의화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조진형	최경환	최규성	최병국
최영희	최철국	허천	현기환
홍일표	홍재형		

○산회 시 재석 의원(67인)

강명순	강성천	고홍길	곽정숙
권경석	권영길	김상희	김선동
김성조	김소남	김영록	김용구
김유정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춘진	김충조	김혜성	문희상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지원
배은희	백재현	손범규	송영길
신성범	안홍준	양승조	원희목
유원일	유일호	윤상일	윤석용
이두아	이상득	이성남	이성현
이애주	이용희	이운성	이정선

이정현	이종혁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전현희	정갑윤	정수성
정영희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조문환	진수희
차명진	최경환	최연희	최영희
허원재	허천	허태열	

○청가 의원(17인)

김광림	김무성	김성곤	김진표
김충환	김학송	남경필	노영민
문학진	송광호	윤상현	이범관
이용삼	이종걸	정진석	추미애
현경병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박계동
입법차장	안병욱
의사국장	이종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운찬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출석 정부위원

공정거래위원장	정호열
금융위원장	진동수

【보고사항】

○의안 제출

私道法 일부개정법률안

(2009. 11. 9 정부 제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

(2009. 11. 9 정장선·김용구·이한성·김재균·정병국·양승조·우제창·김부겸·강기정·주승용·최철국·조정식·조승수·이해봉·김춘진·이종혁·오제세·김유정·박기춘·이시종·박순자·최규성·이석현·김성곤·강창일·서갑원·원혜영·김영록 의원 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

(2009. 11. 9. 허태열·정의화·송광호·김정훈·장제원·김동성·박보환·신성범·조전혁·성윤환·서상기·이종혁·조원진 의원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

(2009. 11. 9. 허태열·정의화·송광호·김정훈·

장제원 · 김동성 · 박보환 · 신성범 · 조전혁 ·
성윤환 · 서상기 · 조원진 이종혁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0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 발의)

(2009. 11. 9 김학용 · 김성수 · 유정현 · 이범래 ·
여상규 · 정해결 · 조진래 · 김정권 · 유정복 ·
이사철 · 조전혁 · 유재중 · 이에주 의원 발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곤 의원 대표발의)

(2009. 11. 9 김성곤 · 강창일 · 박기춘 · 오제세 ·
주승용 · 이용섭 · 김영록 · 조영택 · 김동철 ·
강기정 · 유성엽 · 이시중 · 김재윤 · 김상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0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범관 의원 대표발의)

(2009. 11. 9 이범관 · 김우남 · 유성엽 · 송영선 ·
김성희 · 나경원 · 조전혁 · 홍사덕 · 이한구 ·
김옥이 · 이춘식 · 김충환 · 진영 · 주광덕 ·
홍일표 · 이한성 · 구상찬 · 이성현 · 오제세 ·
이해봉 · 김성태 · 손범규 의원 발의)

11월 10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금래 의원 대표
발의)

(2009. 11. 9 김금래 · 김을동 · 정갑윤 · 성윤환 ·
박민식 · 진성호 · 송훈석 · 김소남 · 홍사덕 ·
장제원 · 장윤석 · 한선교 · 윤석용 의원 발의)

11월 1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

(2009. 11. 9 권택기 · 박준선 · 황영철 · 손범규 ·
김성태 · 권영진 · 김태원 · 이한성 · 고승덕 ·
이춘식 · 이성현 · 강명순 의원 발의)

11월 1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청원 제출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

(2009. 11. 9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
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전걸로부터 박영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고용보험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09. 11. 9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로부터 원혜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 1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서면질문서 제출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관한 질문서

4대강 사업에 관한 질문서

(이상 2건 2009. 11. 5 조정식 의원 제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관한 질문서(2건)

(이상 2건 2009. 11. 6 정태근 의원 제출)

북한 급변사태에 관한 질문서

(2009. 11. 9 권영세 의원 제출)